

한국은행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한국화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고조선·삼국 ~ 조선후기 —

2018. 12. 14.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 평 식

한국화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고조선 · 삼국 ~ 조선후기 —

연구책임자 박 평 식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연구보조원 고은경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이태경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이범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최원하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과정)

차 례

I. 서언	1
II. 고조선 ~ 삼국	4
1. 원시 화폐의 유형	4
2. 고조선의 대외교역과 명도전(明刀錢)	7
3. 삼한~삼국시기 교환경제의 진전과 화폐	12
4.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15
5. 전망과 제언	20
III. 고려시기	23
1. 철전(鐵錢) · 동전(銅錢)의 주조와 보급	23
2. 은화(銀貨)의 유통	29
3. 고려 말 화폐제 개혁론	32
4.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35
5. 전망과 제언	38
IV. 조선전기	40
1. 조선초기의 화폐정책과 화폐유통	40
2. 16세기의 포화(布貨) 유통과 ‘추포(麤布)’	46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50
4. 전망과 제언	55

V. 조선후기	58
1. 은(銀)의 유통과 17세기 행전책(行錢策)	58
2.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유통과 보급	65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74
4. 전망과 제언	81
VI. 결어	84
VII. 참고문헌	88

표 차례

<표 1>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고조선~삼국)	15
<표 2>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고려시기)	35
<표 3> 국초-16세기 포화 간의 비가	47
<표 4> 한국은행 역사 화폐사 서술 검토 (조선전기)	50
<표 5>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조선후기)	74

그림 차례

<그림 1> 고려·조선시대의 화폐사용사정	57
------------------------------	----

I. 서 언

한반도인과 그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원시사회부터 원격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각기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거래의 편의성, 가치의 저장 및 과시 등의 목적으로 희소물자를 이용한 화폐를 제작·도입하여 사용하였고, 역사적 변천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화폐의 종류와 가치, 유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화폐 사용과 유통의 변천을 추적하여 그것이 과거인의 경제생활 및 사회구조에 갖는 의미를 찾는 화폐사 연구는 우리 역사 속 경제의 발달상을 그려내는 데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학계가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시켜 온 중에도 화폐사 연구는 다소 미진한 편이었다. 전통적 화폐 발달론에 근거한 일본인 학자들의 초창기 연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진척시켰으나, 전근대 화폐사에 대해서는 물품 화폐의 사용을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단계로 평가하여 왔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특히 전근대의 교환경제를 자급자족의 단계로 설정하고 왜소하게 정리하여 온 학계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966년의 『한국화폐사』 이후 최근의 『우리나라의 화폐』(2015)에 이르기까지 한국은행 발권국이 그간 발간해온 화폐사 및 화폐도감 서적들 역시 전근대 화폐사 서술을 최대한 소략하게 다루고 개항기 이후의 화폐사 서술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근대 화폐사 연구의 부진과 관련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근대 경제상에 대한 저평가의 영향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화폐사 연구는 화폐 사용과 유통의 실재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을 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그 배경과 연원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폐사 서술 역시 기왕의 연구들을 재고하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쓰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전근대 시기 한국 화폐사의 전개 과정을 네 시기, 즉 (1) 고조선 ~ 삼국, (2) 고려, (3) 조선 전기, (4) 조선 후기 등으로 나누어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고조선에서 삼국에 이르는 시기의 화폐 사용과 유통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 고대 중국 화폐의 발굴 및 중국 고문(古文)에 나타나는 교역 관련 기사 등 단편적인 사실들만이 전해지고 있어, 당시 화폐경제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 내 중국 화폐 발굴 지역의 분포와 화폐 유입 경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고조선 및 삼한·삼국의 교역체계와 연결시킨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시기는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통해 경제 전반을 장악한다는 ‘이권재상(利權在上)’, 혹은 ‘화권재상(貨權在上)’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인 화폐 정책을 추진한 시기였다. 고려 초·중기 화폐 보급 정책이 전개 정립되는 과정, 그리고 고려후기 대외무역의 번성이 화폐제도, 특히 은병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삼국 이래 민간에서 유통되었던 마포(麻布)의 화폐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조선전기에는 역시 전조(前朝)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조폐권을 독점하려는 ‘화권재상’의 인식 위에, 국폐로서 저화(楮貨)를 발행하고 민간에서 유통되는 포화(布貨)의 통용을 일절 금지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민간 교환 경제의 성장 속에 기준 통화로서 5승면포(五升綿布)와 소액 화폐로서 척단추포(尺短麤布)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추적하고, 민간에서 유통된 포화의 개념과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는 16세기 이래의 상업 발전을 토대로 동전 유통 정책[行錢策]이 전개되고,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전국적으로 유통·보급된 시기였다. 이 장에서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은 유통문제, 17세기 행전책과 상평통보의 유통, 그에 따른 폐단과 전황(錢

荒), 폐전론 및 고액전 발행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선후기 정부 주도의 화폐 유통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화폐사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역대 화폐사 서적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폐』의 새로운 개정 방향 및 그 지침의 대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향후 학계의 화폐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II. 고조선 ~ 삼국

1. 원시 화폐의 유형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만주-한반도 일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 교역을 통해 생필품의 교환은 물론 각종 기술과 문화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그 교류의 흔적과 면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고 발굴을 통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화폐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물품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의 진척을 가늠해보고, 이를 통해 원시 화폐의 유형과 그 특징을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원시 교역에서 주목해야 할 재료로 대표적인 것이 흑요석(黑曜石)이다. 흑요석제 석기는 구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긴 시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후기 구석기 시대와 초기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잔석기 계통의 유물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인근의 흑요석은 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서,¹⁾ 흑요석의 주산지가 아닌 동남 연안 지역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흑요석의 원산지를 추론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해상을 통한 석기 재료 교역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만으로는 흑요석 그 자체로 가치 척도

1) 鄭澈,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3~5 쪽; 장용준, 「한국 구석기시대 흑요석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구석기학보』 1-28, 2013.

2) 흑요석의 결정, 조직 분석과 이를 통한 산지 추정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김주용, 양동윤, 「남한 흑요석 및 관련암종 분포지와 흑요석 기원지 분석 방법 고찰」,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0; 이정철, 「우리나라 구석기유적 출토 흑요석의 원산지 연구 동향」, 『忠北史學』 21, 2008; 좌용주, 「흑요석 산지연구에 사용되는 지구화학 자료와 해석」, 『한국구석기학보』 28, 2013; 진미은, 문성우, 류춘길, 좌용주, 「백두산 흑요석과 가덕도 흑요석제 석기에 포함된 미세결정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27권 4호, 2014; 이선복, 좌용주, 「흑요석 산지 추정 연구의 재검토」, 『한국구석기학보』 31, 2015; 大谷熏, 「韓國 後期舊石器 狩獵具制作과 石材消費 戰略」, 『호서고고학』 35, 2016; 황가현, 좌용주, 「백두산과 규슈 흑요석 내 미세결정의 형태와 조직」, 『韓國地球科學會誌』 38권 7호, 2017 등이 있고, 한반도와 일본 규슈 지역 간 흑요석제 석기 교류에 관한 연구로는 김상태, 「한반도 출토 흑요석기와 원산지 연구현황」, 『한국구석기학보』 6, 2002; 이기길, 「일본 구석기학계의 흑요석 연구 동향」, 『

나 가치 저장의 수단인지, 아니면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 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흑요석이 후기 구석기~청동기 시대 원격지 교역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흑요석과 함께 선사시대 교환 경제의 표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옥을 들 수 있다. 옥은 특정한 광물학적 성질을 띤 암석을 가리키는 말로, 그 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옥을 재질과 경도에 따라 연옥(軟玉), 경옥(硬玉), 가옥(假玉) 등으로 구분하는데, 국내의 옥기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³⁾ 한반도에서 출토된 옥기는 대개 중국에서 말하는 마노, 수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장의 위세품이나 장신구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청동기 시대 이후로는 점차 그 세공 기술이 발달하여 독자적인 옥 장신구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그 원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성분과 원산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이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

한반도에서 물물교환의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교환 가치를 갖는 실물 화폐로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석제 농기구와 손칼,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 돌을 갈아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규격의 돌판이었다.⁵⁾ 생업에 필수적인 도구가 교환의 매개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⁶⁾ 그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4; 이현중, 이혜연,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인의 흑요석에 대한 전략적 활용에 대한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1호, 2005; 河仁秀, 「신석기시대 한일 문화교류와 흑요석」 『韓國考古學報』 58, 2006; 신숙정, 「환동해지역 신석기시대의 문화와 사회교류」, 『한국신석기학보』 14, 2007; 김건수, 「쿠로시오(黑潮)와 남해안지방 신석기문화」,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등이 있다.

3) 임승경, 「선사시대 옥기의 성격 및 그 제작기술에 대한 일고찰」, 『史林』 20, 2003, 130~138쪽. 한편 '요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요녕성 서부 요하 유역의 신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옥기와 후대의 한반도 문화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제기된 바 있다.

4) 이찬희, 김재철, 나건주, 김명진, 「아산 시전리 유적 출토 옥기(천하석)의 재료과학적 특성과 산지 해석」, 『문화재』 39, 2006; 양아람, 「한반도 출토 수정다면옥의 전개양상과 특징」, 『한국고고학보』 93, 2014.

5) 평양 미림동, 평남 강서군 태성리, 황해 봉산군 신흥동 유적에 발견된 돌판을 복한 학계에서는 '돌돈'이라 하여 현물 화폐의 일종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발굴 자료가 더욱

러나 교역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가치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필품만으로는 교환 수단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희소성을 가진 각종 금속이나 포백(布帛) 등의 직물, 조개돈(貝殼) 같은 것들이 화폐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널리 화폐로 통용된 것이 바로 보배조개(개오지)를 비롯한 패각류(貝殼類)였다. 조개는 낚시바늘, 바늘, 칼날 제작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장신구의 재료로도 쓰였기 때문에 용도가 광범위하고, 그렇기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희소성도 갖추었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최적이었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웅기 송평리 유적, 황해도 사리원 상매리 유적에서 발굴되었고, 그 화폐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⁷⁾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서국태, 「신흥동 팽이그릇집자리」, 『고고민속』 3, 1964; 홍희유, 『조선상업사』 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등이 있다(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3, 일조각, 157쪽에서 재인용).

6)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74~75쪽.

7)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준경, 「패각 자료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신석기연구』 4, 2002; 박선미, 「웅기 송평동 출토 貝殼 및 貝殼形 玉 검토」, 『韓國考古學報』 56, 2005 등이 있다. 이외에도 패총과 거기 있는 패류에 관한 분석 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 패각 화폐 출토지에 관한 언급은 박선미, 앞의 책, 75쪽을 참조하였다.

2. 고조선의 대외교역과 명도전(明刀錢)

원시 부족 국가 단계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로서 고조선이 성립되면서 교역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위만조선(衛滿朝鮮) 시기에 접어들면 중국과 진국(辰國) 사이의 중계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원거리 교역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중국의 화폐가 유입, 통용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의 화폐 가운데 가장 널리, 오랫동안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연(燕)에서 발행된 금속 화폐인 명도전(明刀錢)이다.⁸⁾

명도전 연구는 고조선~삼국 화폐 연구 가운데 그 성격을 두고 가장 활발한 논쟁이 전개된 분야라 할 수 있다. 명도전의 성격과 분포, 명도전이 매개가 된 교역망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명도전의 화폐사적 의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고 발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가장 오래된 연구는 일본인 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朝鮮考古學研究(1948)』이다. 이 책에서 그는 명도전이 한 군현 설치 이전부터 중국계 유이민이 한반도 북부로 이주해왔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학자들은 그의 이론에 따라 명도전이 중국 세력권의 확장 또는 식민의 증거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세키노 다케시(關野雄)는 한반도 서북부 명도전 유적의 성격을 퇴장유적(退藏遺蹟)으로 파악하였으며,⁹⁾ 아키야마 신고(秋山進午)는 연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진출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다무라 고이치(田中晁一)은 요하 동쪽의 명도전 유적은 선(先)고구려계 민족의 유적으로 요동 지역은 한족과 비한족이 잡거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¹⁾

8) 명도전 이외에 중국 동북부~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출토된 화폐로 布錢, 一化錢, 明化錢, 明四錢 등이 있으나 이들 화폐 가운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추정되는 요동-압록강-한반도 서북부 일대의 출토 사례가 한 자릿수로 극히 적고 대개 명도전과 공반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고조선이 이 화폐를 교역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선미, 앞의 책, 214, 222~223쪽.

9) 關野雄, 「刀錢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 35, 1965, 44쪽.

10) 秋山進午,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下)」, 『考古學雜誌』 54-4, 1969, 25쪽.

한편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국과의 합작 발굴을 통해 명도전의 성격을 중국과의 교역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명도전이 출토된 요하 이동~청천강 이북 지역의 문화 유형(‘세죽리-연화보 문화’)을 결정짓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한편 명도전의 아류에 해당하는 명화전, 일화전 등의 화폐는 고조선 주민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고조선 고유의 화폐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¹²⁾

남한에서는 윤무병이 앞서 언급한 세키노와 아키야마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명도전의 분포를 요동~청천강 이북 지역 일대로 설정하고, 중국, 특히 연의 동북 진출로 인한 중국 세력의 확장, 중국인의 유입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보는 견해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¹³⁾ 이러한 견해가 통설로 인정, 반복되는 가운데 최몽룡은 명도전을 고고학의 중심지 교역 이론을 도입하여 고조선의 대중국 교역과 관련짓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¹⁴⁾ 1990년대에는 통설에서 벗어나 고조선에서의 유통 가능성, 그리고 위만 조선을 수립한 세력이 가져온 철기문화와 관련짓기도 하였다.¹⁵⁾ 2000년대에는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서북부의 화폐 관련 유적 연구를 종합하여 명도전과 고조선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대 유적에서 발견된 문화 유형의 다양성을 들어 이 일대는 한족, 북방 유목 민족, 예맥족 등이 잡거하는 곳이었고, 명도전은 다양한 민족이 서로 잡거하는 가운데 고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증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11) 田中晃一,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1) - 清川江以北の明刀錢出土遺蹟の再檢討」, 『東アジア世界史の展開』, 汲古書院, 1994(박선미, 앞의 책, 25쪽에서 재인용).

12) 북한에서 이루어진 명도전 관련 연구로는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1963-1965)』, 사회과학출판사, 1966; 고고학연구소, 『고고민속론문집』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5쪽; 사회과학출판사 『고조선문제연구』, 1973; 최택선·리란우,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박영초,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진욱,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손량구, 「료동지방과 서북조선에서 드러난 명도전에 대하여」, 『고고민속론문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등이 있다. 이상의 목록은 박선미, 앞의 책, 35-36쪽을 참조하였다.

13) 윤무병, 「韓國 靑銅遺物の 研究」, 『白山學報』 12, 1972; 윤무병,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73; 1980; 윤무병, 『韓國靑銅器文化研究』, 예경산업사, 1991.

14) 최몽룡, 「고대국가성장과 무역 - 위만조선의 예」, 역사학회 편,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1985; 최몽룡, 『衛滿朝鮮』, 『韓國古代國家形成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5) 박순발,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고찰」, 『考古美術史論』 3, 1993; 서영수, 「고대 국가 형성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2, 한길사.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조선과 관련된 몇 안 되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고 자료의 성과를 접목시켜 고조선이 원거리 교역과 명도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¹⁶⁾

중국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고전폐학(古錢幣學)의 영역에서 명도전의 한반도 유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체로 ‘명도전의 출토 범위 = 연의 강역’이라는 도식에서 명도전의 통용 범위를 중국인의 활동 영역, 중국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아예 고조선에서 화폐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연-진(秦) 장성이 명도전 출토의 남방한계선인 청천강 유역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지극히 자국중심적 시각에서 명도전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명도전을 고조선 교역 활동의 결과로 이해하고, 고조선이 연의 요동 진출 이전부터 명도전을 제작, 사용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장보첸(張博泉)의 연구는 고조선의 화폐 사용을 긍정하고 명도전을 교역 활동과 관련짓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인다.¹⁷⁾

요컨대 지금까지의 명도전 연구는 명도전이 단순히 중국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초창기 견해를 극복하고 고조선과 중국의 여러 왕조(齊, 燕, 秦, 漢 등) 간의 교역 활동의 매개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인가?’에 대한 답을 두고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압록강 유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 유적에서 발견된 명도전 주형(鑄型, 거꾸집)과 명도전 출토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조선에서 명도전을 직접 주조하여 통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물론 내지 교역에서도 적극 활용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된

16) 박선미,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 유적」, 『선사와고대』 14, 2000; 박선미, 「요하이동의 명도전유적과 연의 관련성 문제 검토」, 『전농사론』 7, 2001; 박선미, 「전국~진한초 화폐사용집단과 고조선의 관련성」, 『북방사논총』 7, 2005; 박선미,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고대』 28, 2008a; 박선미, 『화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의 교역』,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b; 박선미, 「동북아시아의 交流史 復原을 위한 明刀錢의 초보적 探討」, 『동북아문화연구』 18, 2009; 강인옥,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韓國古代史研究』 64, 2011.

17) 張博泉, 「明刀幣研究續說」, 『北方文物』 4期, 2004.

한편, 유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조선의 명도전 통용은 대외 교역에 국한되었을 뿐이고 명도전 주형은 고조선 멸망 이후의 것으로 고조선의 대중국 교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⁸⁾

이에 대해 박선미는 명도전 출토 유적의 분포는 명도전을 처음 주조,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연의 강역인 중국 하북성(河北省) 일대와 압록강~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북성 일대의 유적이 가까운 거리에 군집을 이루고 거꾸집이 하북성 승덕(承德) 등지에서 집중 출토된 반면, 압록강~한반도 서북부 일대는 넓게 산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다 주형이 발견된 유적이 극소하며 후기 고조선(위만조선)의 중심지로 비정되는 대동강 유역에도 출토 유적이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명도전은 연의 강역인 하북성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의 정치체가 교역 활동을 통해 명도전 유통에 동참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¹⁹⁾

명도전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출토되고 있는 중국 화폐로 반량전(半兩錢)과 오수전(五銖錢), 화천(貨泉, 王莽錢이라고도 함) 등이 있다. 특히 오수전은 풍납토성, 무령왕릉 등지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기간 한반도 화폐 유통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명도전이 한반도 서북부 이남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데 비해,²¹⁾ 반량전과 오수전은 동북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라고 보기 어려운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 심지어 내륙 지역에서도 상당수 출토되고 있고, 평양 낙랑토성 유적에서는 반량전 거꾸집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에서 주조 및 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²²⁾

18) 전자의 견해는 주로 북한 측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며(각주 15 참조), 후자의 견해는 초기 연구와 중국 측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다(주 16 및 박선미, 앞의 책, 36쪽 참조).

19) 박선미, 위의 책, 222쪽.

20) 권오영,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百濟研究』 36, 2002, 28~29쪽, 원유한, 앞의 논문, 16쪽.

21) 박선미, 위의 책, 221쪽.

22) 李鈞起,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古代南海岸地方 對外交流」, 『지방사와 지방문화』 9, 2006,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 등 진·한대 중국 화폐의 주조 및 유통과 관련된 국내 학계의 최근 연구는 대체로 중국 화폐의 집중 출토 분포의 변동과 중국-한반도 교역망(혹은 교역 시스템)의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²³⁾ 낙랑토성 등지에서 출토된 거푸집을 바탕으로 중국 화폐의 한반도 ‘토착화’ 및 광범한 유통의 가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²⁴⁾ 하지만 출토품과 유적의 수가 많지 않고 문헌 자료의 한계로 당시 중국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어려운 까닭에 아직은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120~121쪽; 박선미, 앞의 논문, 2008a, 274~279쪽; 위의 책, 229~230쪽; 방민규, 「고고학 발굴성과를 통해 본 고대 한반도 남해안지역의 대외교류」, 『전통문화논총』 10, 2012, 100쪽.

23) 박선미, 앞의 논문, 2005; 앞의 논문, 2008a.

24)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현혜, 이범기, 김경철 등은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는 대외 교역의 매개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지에 가깝고, 다수의 매납 유적이 정치체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李賢惠,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165쪽; 이범기, 앞의 논문, 132~133; 김경철, 「南韓地域 출토 漢代 金屬貨幣와 그 性格」, 『호남고고학보』 27, 2007, 12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漢(前漢) 시기 화폐 주조가 문란하여 私鑄가 빈번하였던 점으로 보아 실제 중국 계통의 유이민에 의해 주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박선미, 앞의 책, 230쪽).

3. 삼한~삼국시기 교환경제의 진전과 화폐

삼한에서 삼국에 이르는 시기의 화폐사 연구는 현존 사서의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통설’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의 화폐 연구와 비교해볼 때도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고고학계의 연구 역량이 대체로 선사시대에 집중된 관계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조사 또한 극히 드물어 사서의 기록을 보완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기 고조선 시대를 전후로 한 시기의 화폐 연구에서는 화폐 자료 자체가 유통과 교역망, 정치 권력의 상당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취급되지만, 이 시기의 경우 사회경제사나 화폐 그 자체를 다룬 것이 극히 드물기도 하거니와 당시의 수취 제도를 비롯한 경제 제도와 정책의 운용, 혹은 시장을 통한 유통과 원거리 교역의 일부로서 화폐 관련 기사가 간혹 언급, 인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물품 화폐 또는 금속 칭량 화폐가 통용되었던 시대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삼국 시기 사회경제사 연구에 등장하는 화폐 경제의 여러 단서들을 끌어모아 화폐 연구의 여러 쟁점을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삼한 시기 화폐 유통의 단서는 변한(弁韓)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의 국제 교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한은 풍부한 철 산지로 그것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로서의 철’이 거래의 매개물인지, 아니면 완제품으로서의 철인지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자세히 검토할 부분이 있으나²⁵⁾ 이 시기에 대량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상철부(板狀鐵斧), 철정(鐵鋌, 덩이쇠) 등이 4~5세기 이후 점차 경량화, 규격화되어 대거 매납된 채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화폐로서의 가치를

25) 이현혜, 「철기보급과 정치권력의 성장-변진한지역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가야제국의 철』, 신서원, 1995.

지닌 물품으로 보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²⁶⁾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성립, 성장한 동옥저와 신라에서는 금·은무문전이 제작,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에 일부 모순점이 있고, 특히 이를 기록한 『해동역사(海東繹史)』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고고 자료의 출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일부 있으나,²⁷⁾ 대체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연구에서는 후대 신라가 보여준 금속 세공 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 적어도 신라에서 금·은 등의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견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²⁸⁾

교환 경제의 발전과 대외 교역의 과정에서 화폐가 갖는 위상에 대한 연구가 상업사, 무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화폐의 사용과 유통은 거래의 편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화폐 발달의 배경 및 조건으로 고대 상업과 무역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대 교환 경제와 대외 교역에서 화폐 사용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연구로는 김창석과 윤재운의 연구가 거의 유일(唯二)하다시피 한데, 두 연구 모두 국내에서 출토된 화폐 유물과 화폐 사용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통설의 입장에서 화폐사를 정리하고 있다.²⁹⁾

관련 고고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시기 화폐 연구에 있어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다양한 귀금속 자료들은 삼국 시기 화폐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소형관 수 점이 백제 왕실의 주도 하에 주도된 금속 화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

26) 원유한, 앞의 논문, 22-23쪽.

27) 김창석, 『三國 및 統一新羅의 商業과 流通』,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27-130쪽;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 현실』 42, 2001, ; 원유한, 위의 논문, 26쪽.

28) 원유한, 위의 논문, 25-26쪽.

29) 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9. 특히 김창석은 책의 4장을 할애하여 그간의 화폐사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다. 이 주장에 따르면 출토된 금제소형판은 삼한~삼국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금속기의 경량화, 규격화를 따르고 있고 여기 새겨진 명문 가운데 한글자가 백제 고유의 양사(量詞)로서 백제의 도량형제에 부합한다는 점, 중국 강남, 서역 일대에서 출토된 금정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국 강남도(江南道) 지역과의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³⁰⁾

삼한~삼국시기의 포곡(布穀, 옷감과 곡물)은 삼국시기 사회생활의 필수 생산품이면서 수취의 대상이자, 이식(利殖, 자산 증식)과 거래 수단의 기능을 지닌 물품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무왕 5년(665)에 있었던 견포 규격 통일 조치와 관련하여 조세 수취에 있어서나 역내 교역에 있어 주요한 화폐로 활용되었던 견포(絹布)의 규격의 변천 문제에 관한 여러 연구가 주목된다.³¹⁾ 이 연구들은 도량형의 정비 및 통일에 초점을 둔 것이기는 하나, 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한 사회 정책의 측면, 유통과 화폐 가치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편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물품 화폐의 사용을 언급한 연구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김창석의 연구는 삼국이 각기 조세 수취 제도를 확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물(곡식과 직물)을 주로 수취하였으며, 그것이 곡식과 포를 화폐로 사용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았다.³²⁾ 그 외에도 재정 개혁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에서 물품 화폐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화폐사 연구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0) 박남수, 「益山 彌勒寺址 출토 金錠과 백제의 衡制」,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75쪽.

31) 이우태, 「한국고대의 척도」, 『태동고전연구』 창간호, 1984; 윤선태, 「한국 고대의 척도와 그 변화 - 고구려척의 탄생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16, 1999; 조범중, 「신라 문무왕대 사회정책의 성격검토」, 『신라문화』 16, 1999; 이종봉,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 혜안, 2001; 정혁수, 「文武王之 絹布 규격 조정과 통일정책」, 『新羅史學報』 38, 2016.

32) 김창석, 앞의 책, 177~182쪽.

4.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1>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고조선~삼국)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古代 貨幣의 概念과 種類 貨幣의 發生과 變遷 第一章 高麗 以前の 概況 第一節 史前時代 第二節 古代 朝鮮 箕子朝鮮의 子母錢 鑄造說 衛滿 朝鮮 馬韓의 銅錢說, 辰韓의 用鐵 東沃沮의 金銀無文錢 第三節 三國時代 新羅 - 百濟 - 高句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중국의 화폐 개념을 장황하게 서술 - 당시 한국 화폐사 연구가 미진했음을 보여줌. · 구석기 시대의 존재 부정(당대 연구 성과의 한계) · 명도전 출토에 따른 중국전 사용설을 부정하고, 이는 단지 정치 지도자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물품에 불과함 ·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한사군에서 오수전(五銖錢)의 수입 및 주조설, 금은무문전(金銀無文錢), 금은정(金銀錠), 철정(鐵錠) 사용설을 제시함.
『증보 한국화폐사』 (1969)	<p>概觀 第一章 古代 및 三國時代 第一節 古代 신석기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한사군 시대 - 삼한시대 - 마한, 진한, 동옥저의 鑄錢說 第二節 三國時代 신라 - 백제 - 고구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 판과 대동소이. 1960년대 전개된 고고학 연구의 성과를 반영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이전’ 대신 고대와 삼국시기로 시대 구분 항목 변경 · 화폐 발달이 외국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시각에서 화폐사를 서술함. · 고대 및 삼국시기 금속 화폐의 주조 기록의 신빙성 의심 · 화폐와 관련 기사를 직접 인용하여 서술을 보강 · 명도전 등의 중국의 금속 주조 화폐 - 화폐보다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평가 · 화천(貨泉), 오수전, 오수전 주물 틀의 출토 사실을 언급하며 한대(漢代) 화폐의 광범위한 유통 가능성을 긍정하는 서술이 등장하며, 이를 한사군 또는 한과의 직접 교역의 결과로 파악 · 신라의 화폐 사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함. 금은무문전, 화폐 사용의 이중구조, 地金塊, 철정 등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함
『韓國의 貨幣』 (1982)	<p>第1章 古代 概說</p> <p>第1節 貨幣의 導入과 部族國家 時代</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사시대 및 고조선 시대 2. 한사군 시대 3. 삼한 시대 <p>第2節 三國時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분량이 대폭 축소됨. 화폐 관련 문헌 사료의 기사를 대폭 보장함. · 구석기 시대를 하나의 시대 구분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함. · 66, 69년 판에서 언급되었던 고조선의 자모전(子母錢) 주조 기록에 대하여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실증하기 어렵다고 서술함. · 명도전과 관련하여 중국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함. 다만 고조선 문화가 중국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인정함. · 삼한~삼국 시기 화폐 사용과 관련하여 화폐 사용의 사회경제사적 배경(벼농사, 마포 생산 등 수공업의 발전으로 교환거래 증가, 관시(官市) 및 그 감독기구로서 시전(市廩) 설치를 통한 상업의 발전, 도량형, 우경, 논농사, 견·마직물 등 방직기술의 발달)을

	주요 내용
	<p>구체적으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의 국제 무역과 문물 교류에 대한 언급 ·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조세 징수 품목으로서 곡물, 직물 등이 화폐의 가치를 갖는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언급 · 신라 시대 직물의 질량 등의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직물을 매개로 한 교환 거래가 빈번해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점차 조악한 품질의 직물을 화폐로 사용(麤布化)하는 현상이 나타남. · 신라의 금세공품 기술의 발달 수준을 언급하며 상류층의 금은 경제 - 서민층의 곡(穀), 포(布) 경제의 이중구조에 대해 설명함.
『韓國의 貨幣』 (1994)	<p>第1章 古代</p> <p>第1節 先史時代 및 古朝鮮時代의 貨幣</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先史時代 2. 古朝鮮時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子母錢 使用說 나. 명도전 사용 ‘설’ 3. 漢四郡時代 <p>第2節 三韓時代의 貨幣</p> <p>第3節 三國時代의 貨幣</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경제적 배경 2. 유통수단 <p>· 서술 분량과 내용이 대폭 축소됨.</p> <p>· 대체로 69년, 82년 판에 적용된 시각, 관점, 서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p>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 성과의 진전 및 화폐 관련 사료의 재발견을 통해 추측 위주의 서술에서 점차 사례 위주의 실증적 서술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82년에 출간된 『한국의 화폐』는 적어도 고조선~삼국 화폐사 서술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사 연구의 발전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화폐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서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화폐사 서술의 발전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개정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서술이 1969년 『증보 한국화폐사』의 서술을 반복하는 방향으로 회귀했다.

2015년 새단장하여 출간된 『우리나라의 화폐』의 고조선~삼국 화폐사 서술 또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소화하고 서술에 반영하여 이 시기 화폐사의 개략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선사시대 물품 화폐 사용의 양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술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이 흑요석에 관한 서술을 포함시킴으로써 흑요석이 화폐로 활용되었던 듯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흑요석에 관한 최근 연구는 대체로 흑요석의 성분 분석과 이동 경로에 국한되어 있을 뿐 그것이 교환의 매개인지, 교환의 대상인지조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물품 화폐의 일종인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일종의 비약이다.

명도전에 대한 연구 성과를 흡수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비록 논란은 있으나 명도전은 요동~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 출토되고 있는데, 그 매장 형태가 매납·퇴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고조선의 영역 범위였던 곳에서 출토된 명도전의 유형과 매장 형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어도 중국과 교역의 지표로서 명도전이 교역의 매개물 또는 대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통일 신라 시기 물품 혹은 칭량 금속 화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서술이 전무하여 고려 시기와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통일 신라(남북국 시대)는 이전보다 국제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교환 경제의 수준과 범위 또한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직물의 생산 및 거래 수요의 폭증을 가져왔고 그것이 조약한 직물이 거래의 매개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실, 그리고 후삼국, 고려 초기까지 널리 유

통되었던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200여 년에 달하는 남북국 시대의 경제, 화폐의 발전상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전망과 제언

고조선~삼국 화폐사 연구는 고고학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그 면모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점차 갖추어가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명·재검토할 분야, 새로이 주목해야 할 분야가 많다. 여기서는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및 화폐사 서술의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새로 발간될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은 물론, 원시~고대 화폐사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언급하고, 이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매우 소략한 형태로 축약된 선사시대의 화폐 사용에 관한 서술을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판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은 앞서 검토한 대로 물품 화폐 사용의 일반론을 제시하면서 흑요석의 사례만 일부 소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된 보배조개 등의 물품 화폐에 대한 서술은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흑요석이 교환의 매개물인지 교환의 대상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흑요석에 관해 짧게 언급하고 있는 서술 방식은 자칫 이 시기 화폐의 성격을 오해할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흑요석에 대한 서술 대신 실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패각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서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패각 뿐만 아니라 흑요석·옥기 등 가치가 희소한 물품, 그리고 이 시기 교환 경제의 대중을 이루고 있었을 생활용 도구, 무기 등 다양한 물품이 교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재료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동형 반복을 극복하고 고고학 이론을 활용한 적극적 해석을 다시 도입하여 논쟁의 장을 형성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2. 명도전의 성격과 중국과 요동, 한반도를 잇는 교역망에서 명도전이 화폐로서 가지는 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박선미의 연구는 명도전을 비롯한 중국의 고대 화폐가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견해를 제기하는 연구도 많다. 화폐로서의 위상 보다는 비파형 동검과 같이 문화 요소로서의 위상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 연구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도전이 적어도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 주조되었다는 점에서 화폐로서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고대 동아시아의 교역망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국 화폐사 발달 단계에 있어 중요한 계기이자 단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정세 및 영토, 역사 분쟁과 관련되어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남한, 북한, 중국 학계가 공동 조사를 통해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 토론하며 고대 동아시아 교역망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 화폐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검토 작업도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남북국 시대의 교환 경제와 대외 무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고 교환 경제와 대외 무역의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정리 작업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북국 시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물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움직이며 부의 축적을 이끌었던 시대였다. 해상 무역과 한반도인의 중국 및 일본 진출에 관한 여러 기사는 7~9세기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에 한반도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와 화폐 경제, 특히 중국의 유례 없는 대외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무역과 화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대외 무역에 있어 화폐 유통의 양상을 밝히는 한편, 국내에서도 시장을 통한 교환 경제가 발전, 성숙하면서 물품 화폐가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고고학적으로든, 문헌학적으로든 면밀히 조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에 덧붙여 화폐사의 정리와 서술은 고대 사회의 변동, 특히 정치적, 사회·경제적 부침에 유의하여 단순히 당시 사용되었던 화폐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폐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었던 여건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고대 뿐만 아니라 전근대 전반에 걸쳐 한국 화폐사 서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화폐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Ⅲ. 고려시기

1. 철전(鐵錢)·동전(銅錢)의 주조와 보급

고려 전기는 국초 도성 개경에 시전(市廛)이 건설된 이래로 시전상업이 운영되고, 송·거란·여진·일본을 상대로 한 대외 무역이 번성하는 등 안팎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고려의 국내 상거래에서는 포(布)와 미(米)를 중심으로 한 현물화폐가 사용되었다. 현물화폐는 이미 삼국 및 통일신라 시기부터 일상생활에서 교환의 매개물로서 유통되어 왔으며, 조세 수취와 지급의 대상물이기도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³³⁾

또한 고려 전기에는 우리 역사 최초의 금속화폐가 주조되었다. 최초의 금속화폐는 성종 15년(996)에 주조한 철전(鐵錢)이었는데, 이 철전은 상거래에서 원활히 유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목종 5년(1002), 한언공(韓彦恭)이 철전으로 백성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건의함에 따라 다점(茶店)과 주점(酒店)·식미점(食味店) 등에서만 철전을 쓰게 하고, 일반 백성들의 사사로운 교역에 금지했던 포화(布貨)를 다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화폐를 주조한 기록은 숙종조에서 찾을 수 있다. 숙종 2년(1097), 주전관이 설치되어 금속화폐의 유통을 장려케 하고, 동왕 7년(1102)에 해동통보(海東通寶) 등의 동전(銅錢)을 주조하여 관료와 군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또한 동왕 9년(1104)에는 각 주현에 명하여 미곡을 방출하고, 주점과 식점을 열어 화폐를 교역케 하였다고 전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들은 해동원보(海東元寶), 해동통보, 해동중보(海東重寶), 삼한통보(三韓通寶), 삼한중보(三韓重寶) 등으로 이것들은 모두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3) 김창석,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현실』42, 2001.

이와 같이 고려시기의 화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여러 화폐의 주조 사실에 주목하여 그 배경이나 화폐 유통 시도를 구명하였다. 고려가 표준화폐를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초반의 연구자들은 사료에 주목하여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기록에 집중하였다. 숙종조 동전의 주조를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주전론과 관련지어 분석한 것으로서, 숙종과 대각국사 의천의 관계, 의천의 경제 인식 등을 다루며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이 동전 주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였다.³⁴⁾ 의천의 논의가 숙종조 화폐정책에 적극 반영되었다는 초기 연구는 사료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의천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면이 강하며 국가의 경제 정책의 차원으로 화폐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숙종의 적극적인 주전정책의 배경에는 의천 개인의 영향보다는 왕권과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치적·경제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고려의 화폐제도를 국가의 의도와 연관 짓는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⁵⁾ 이들은 성종조 철전의 주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전기의 법정화폐 정책들을 중앙집권 및 왕권 강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국가에서 화폐주조권을 장악하여 물가를 조절하고 상인층을 통제하는 경제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화폐 주조를 통한 이익으로 재정 확보까지 꾀하였다는 것이다. 고려 최초의 금속화폐인 철전이 성

34) 金庠基, 「大覺國師 義天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3, 국사편찬위원회, 1959.

의천은 화폐 유통의 이점으로 권귀들이 유통과정에서 민을 수탈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세를 화폐로 수납함으로써 조운의 부담을 덜며, 녹봉도 일부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해야 하는 신진관료들이 유통경제상의 혜택을 입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다.

35) 蔡雄錫,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 『韓國文化』9, 1988.

金光植, 「高麗 肅宗代의 王權과 寺院勢力-鑄錢政策의 背景을 中心으로-」, 『백산학보』36, 1989.

원유한, 「고려시기의 화폐사-화폐유통시도기의 전반」, 『實學思想研究』30, 2006.

김병인·김도영, 「고려 전기 금속화폐와 店舖」, 『韓國史學報』39, 2010.

원유한은 고대와 달리 국가의 관리 하에 화폐제도가 등장하였고, 국가의 주도하에 철전·동전 등이 주조된 것 역시 국가가 화폐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하며 초점을 맞추었다. 김병인·김도영은 당시의 금속화폐 주조정책이 문벌귀족과 사원세력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왕권강화의 의도를 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원유한은 고려국가의 화폐정책을 능동적, 주체적인 대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중조에 등장한 것 역시 이러한 중앙집권화 과정의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의 동전 주조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도 있다. 고려정부의 동전 주조는 동아시아 통화권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당시 고려에 유입된 중국전의 유통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³⁶⁾ 그러나 고려 내 중국전의 유통과 관련한 내용은 사료적 근거가 거의 없으므로 유의하여 살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려전기 철전과 동전의 주조는 국가 및 집권세력의 의도, 동아시아 교역의 영향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화폐 주조·유통 정책을 당대 상업 환경과 분리하여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화폐는 상업에 참여하는 민인들의 교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화폐의 주조는 당대 고려의 상업 환경이 화폐를 주조하여 보급시킬 만한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상거래의 편의를 위해 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려진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전기의 주전책에 대한 배경 분석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이권 추구를 주된 배경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려전기의 철전과 동전은 정부의 노력으로 도성의 상거래에서 일정 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인 경제, 특히 지방의 상거래에서는 여전히 포·미가 주로 화폐의 구실을 하였으며 동전의 유통은 부진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에 주목하여 고려 전기 주화유통의 부진 혹은 실패의 원인 또한 규명하고자 하였다. 초반의 논의들은 경제 형태가 ‘자연경제 → 화폐경제 → 신용경제’로 발달한다는 힐데브란트의 전통적 이론에 근거하여, 포·미와 같은 현물화폐가 상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사

36) 정용범, 「高麗時代 中國錢 流通과 鑄錢策 -成宗·肅宗 年間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1997.

金榮濟, 「10-13世紀 宋錢과 東아시아의 貨幣經濟-특히 宋錢의 高麗流入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28, 2004.

김영제는 고려 초기 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종이 송으로의 동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전을 주도하였고, 고려 숙종 때 동전을 주조하게 되는 것은 송이 동금을 해제하여 많은 송전이 고려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회를 자급자족 위주의 물물교환 단계로 파악하였다.³⁷⁾ 또한 고려의 경제 구조를 상층부(화폐경제)와 하층부(현물경제)의 이중구조로 파악하고, 고려 왕조가 실제로는 현물경제에 치중했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 부진하였다고 지적하였다.³⁸⁾ 이러한 논의들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려 사회의 미숙함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추포(麤布)와 같은 현물 화폐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곧 고려 경제의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본 것이다. 이 밖에 금속화폐의 유통 부진을 고려의 본관제(本貫制) 사회 구조와 연관 짓는 설명도 있다. 국가의 현물·노동력 중심의 수취체제와 본관제 사회구조가 직접 생산자층의 유통경제 발전을 속박하여 추포 이상의 화폐가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시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후에도 고려의 사회구조가 표준화폐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단계라는 논의들로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고려의 화폐 자체의 가치가 실물가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⁴⁰⁾, 대체적으로는 고려시기의 경제 발달이 미숙했다는 관점을 견

37) 金柄夏, 「高麗時代の 貨幣流通」, 『慶熙史學』3, 1970.

_____, 「高麗朝의 金屬貨幣 流通과 그 視覺」, 『東洋學』5, 1975.

金柄夏는 고려의 당시 경제 상황이 自給自足 위주의 物物交換 단계였으며 직접생산자의 우연적인 상행위가 생산물의 주된 유통방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 민인들의 미숙한 교역에서 화폐의 보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대신 麤布와 같은 半물품화폐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도성 개경의 市廛은 상류층 위주의 예외적인 경제 활동 영역이었다. 半물품화폐라는 용어는 고려시기에 추포가 화폐의 기능을 한데서 불인 명칭이다. 본래 물품화폐는 특정 물품이 가진 가치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등가가치로 여겨지면서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추포는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일반적인 물품화폐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명명하였다.

38) 金三守, 「高麗時代の 經濟思想貨幣 信用 資本 및 利子·利潤思想」, 『淑明女大論文集』, 1978.

金三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의 경제구조를 상층과 하층의 이중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는 경제의 상층부에는 도시나 寺院領의 경제활동, 국제무역 활동이 포함되고, 하층부에서는 마포 중심의 실물화폐가 유통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고려의 금속화폐의 유통이 부진했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이중경제구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고려왕조는 화폐 보급을 권장하면서도 부세제도 등에서는 현물경제에 치중하는 양면성을 띠었는데, 이중구조 속에서 지배층은 화폐소유를 위하여 하층구조를 더욱 수탈하고, 하층 구조의 민인들은 화폐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진 것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民貧이 화폐유통 부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주전량의 부족함 역시 화폐 유통이 부진했던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았다.

39) 蔡雄錫,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 『韓國文化』9, 1988.

40) 김도연, 「고려시기 은화유통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학보』10, 2001.

김도연은 송건의 공급 확대로 동이 부족해져 銅價가 등귀하는 상황에서 고려 입장에서는 동전 유통보다 동 수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았다.

지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기의 정치적 구조 또는 수탈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 하에서 화폐의 유통의 실패원인을 찾는 경향이 강하였다.⁴¹⁾ 이렇게 축적된 연구 성과들은 고려전기 화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발생 하는 단초가 되었다.

한편 고려 사회에서 화폐유통이 부진했던 이유를 교환경제의 미성숙에서 찾는 시각 자체를 반박하는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경제발달 단계론에서 주장하는 보편성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⁴²⁾ 이들 연구들은 금속화폐만을 가지고 화폐경제의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일본적 시각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려 경제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 ‘추포’를 농민들이 사용하는 중추적인 화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⁴³⁾ 이러한 시각의 연

41) 이흥두, 「고려전기의 화폐 구조와 유통정책」, 『實學思想研究』28, 2005.

원유한, 「고려시기의 화폐사-화폐유통시도기의 전반」, 『實學思想研究』30, 2006.

원유한은 우리나라의 화폐사를 큰 흐름으로 정리하고, 그 속에서 고려시기가 갖는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는 고려시기를 포괄하여 10~14세기 말까지를 국가가 각종 명목화폐와 칭량은 화를 法貨로 유통 보급하고자 했던 화폐 유통시도기의 전반기로 규정하였다.

42) 김영제, 앞의 논문, 2004.

김도연, 「고려시기 화폐유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영제는 종래의 연구들이 고려의 금속화폐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아시아의 화폐경제와 고려의 화폐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남송 이후 송전이 고려에 유입되었으나, 이미 고려사회의 경우 은, 포화가 가치척도나 지불수단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동시대 또는 그 이후 서양사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금속화폐의 일상적 사용여부가 화폐경제의 발달 척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금속화폐만을 가지고 화폐경제의 발달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일본적 시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도연은 고려시기에 화폐 유통의 부진이 전반적인 교환경제의 미성숙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경제발달 단계론을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그는 고려시기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제 상태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고려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포, 은, 금속화폐가 같이 유통되었다는 공통점을 찾았으며, 다음 단계의 화폐가 이전 단계의 화폐를 대체한다는 주장에도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43) 송재선,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김도연, 「고려시기 화폐유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송재선은 추포의 출현은 5승포의 단순한 품질 하락이 아니라, 소액의 상업 행위에 필요한 낮은 화폐 단위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도연은 고려전기 교환경제의 미성숙이라는 큰 관점에는 동의하였으나, 당시 상거래에 사용되던 추포에 대해서는 재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추포가 옷감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낮으므로, 상품가치를 가지고 물품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위 ‘상품화폐’로서의 개념을 벗어난 ‘물품화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물품화폐가 고려전기부터 쓰였다는 것은 이들 물품에 대한 정의와 파악이 다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장선상에서, 고려전기 화폐유통의 부진은 이미 포·미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교환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국왕들의 급진적인 금속화폐 유통책이 시장에 혼란 및 거부감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⁴⁴⁾ 이 밖에 전근대사회의 화폐의 기능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⁴⁵⁾이나, 고려의 화폐유통의 부진이 경제발전의 제약이나 이중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왕권이 민간의 자유로운 유통영역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⁴⁶⁾ 또한 고려전기의 화폐정책을 조공관계와 연결한 연구,⁴⁷⁾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있다.⁴⁸⁾

44) 허은철, 「고려 초기 법정화폐 정책」, 『청람사학』22, 2013.

45) 위은숙, 「원간섭기 寶鈔의 유통과 그 의미」,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2001.

위은숙은 기존의 논의들이 화폐의 기능을 주로 교환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전근대 화폐의 기능을 국가적 지불수단과 내부적 교환수단으로 나누어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 논의들이 화폐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 유통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쳐 고려시기 유통경제를 이원화하여 설명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46) 정용범, 「高麗時代 中國錢 流通과 鑄錢策 -成宗·肅宗 年間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1997.

다만 고려 내 중국전의 유통과 관련한 내용은 사료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하므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47) 奥村周司, 「高麗の貨幣流通について-朝貢との關聯性-」, 『早稻田實業學校研究紀要』10, 1975.

48) 崔孟植, 「高麗 銅錢의 效用性에 대하여-遺蹟출토유물을 中心으로-」, 『大邱史學』60, 2000.

2. 은화(銀貨)의 유통

숙종조에는 동전뿐 아니라 은병(銀瓶) 또한 새로이 제작되었다. 숙종 6년(1101)에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은병이 통용되었는데 이 은병이 바로 활구(濶口)이다. 은은 본래 국내 교역에서 포·미를 사용하던 당시에도 국제 무역에서는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숙종 6년부터는 표인(標印)한 은병을 법화(法貨)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은병 주조로 대표되는 은폐제도(銀幣制度)의 성립은 은광(銀鑛)의 발전과 은소(銀所)의 발달이라는 생산력 발전의 요소 외에도, 교역 확대를 통해 성장한 상인층에서 고액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재정 운영수단으로서 은폐에 주목해 온 국가와 당시 권세가로 지칭되던 지배층 역시 새로운 고액화폐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⁴⁹⁾

그러나 은병은 표준화폐이면서도 주로 고액 화폐의 기능을 하였고, 은에 동을 섞어 사주하는 일이 많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은병은 특히 제도의 변질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국가의 법정화폐였으나 국가의 화주(和鑄)와 개인의 도주(盜鑄) 때문에 그 균질성과 고액의 가치성이 위협받았던 것이다. 특히 은병은 고액화폐이면서도 단위가 정량으로 고정되어 모든 교역에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대외무역이나 지배층의 경제활동에서는 은폐의 가분성(可分性)을 이용한 쇠은(碎銀)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국가 역시 은병과 함께 쇠은의 유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⁵⁰⁾ 이와 같은 은폐제도의 붕괴현상은 법정화폐인 은병에서 시작되었으며, 국가가 표인했던 은병이 점차 쇠퇴하고 민간에서의 제작이 가능한 쇠은이 성행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던 은폐제도가 민간 주도로 변하여 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란(武臣亂)과 원 간섭기를 거치며 고려 국가의 경제적 토대였던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가면서 화폐정

49) 이경록, 「高麗時代 銀幣制度의 展開過程」, 『泰東古典研究』17, 2000.

50) 이경록, 「高麗前期 銀幣制度의 成立과 그 性格」,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2000.

책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국가에서는 민간의 도주를 금지하고 은병의 가격을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은폐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對)중국무역으로 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은폐제도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은병의 가격을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충렬왕대 후반부터는 은병의 투매(投賣)와 억매(抑賣)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폐제도의 동요에 따라 민간 상업에서는 오승포(五升布)가 은폐를 대신하여 활발히 유통되었다. 국초부터 물품화폐로 이용되어왔던 포화는 충숙왕을 전후한 시기에 점차 오승포로 발전하며 본위화폐로서 기능하였다. 국가는 은폐제도의 붕괴현상에 대해 포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은폐제도를 쇠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충혜왕 원년에 만들어진 것이 소은병(小銀瓶)이었다. 국가는 소은병을 주조하는 조폐권을 계속 장악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기존 화폐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은폐는 이미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으므로 공민왕 때에는 간관(諫官)들이 은 1냥(兩)을 단위로 하는 은전을 주조하자는 ‘은전주조론’을 헌의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기 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은화의 제작 형태와 기능, 국가의 은화 제작 의도 등 은폐정책에 주목하였다. 주로 은의 출토와 관련된 연구,⁵¹⁾ 공민왕대 은전주조론과 관련한 연구,⁵²⁾ 고려전기 은화의 제도적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한 연구,⁵³⁾ 고려시기 전반에 걸친 은화유통 연구⁵⁴⁾ 등이 있다. 그 중 고려전기 은병 발행에 주목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은병과 쇠은을 구분하지 않고, 칭량화폐(稱量貨幣) 또는 물품화폐의 일종으로 파악해 온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숙종조 표인을 거치면서 칭량화폐에 지나지 않던 은이 명목가치를 부여한 공식적인 금속화폐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연구들보

51)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78, 1992.

52) 田炳武, 「高麗 恭愍王代 銀錢鑄造論의 擡頭와 그 性格」, 『北岳史論』6, 1999.

53) 이경록, 앞의 논문, 2000.

54) 김도연, 「고려시기 은화유통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학보』10, 고려사학회, 2001.

다 은병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적인 금속화폐로서의 존재를 부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고려시기 은 유통을 다룬 연구들은 앞서 설명한 범주에서 은의 활용이 주로 지배층간의 상거래 또는 대중국무역에 사용된 고액 화폐로 기능하였음에 주목하였다. 고려 후기 은화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지배층의 경제활동 또는 고려 후기 은의 대외 유출 상황과 연계하여 당시의 사회경제적 폐단들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은전주조론과 저화 인쇄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3. 고려 말 화폐제 개혁론

원 간섭기 이후 국가재정의 보충과 화폐제 갱신이 국정과제가 되고, 고려 말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층이 개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화폐문제가 재검토되었다. 이에 공민왕대에는 은전주조론이 제기되었으며, 공양왕대에는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국폐로서 저화, 동전을 겸용하고 민간의 오승포를 금지시키자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화폐정책이 제기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고려후기의 화폐정책과 화폐제 개혁론은 고려국가의 화폐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화권재상(貨權在上) 이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전기 이래 철전과 동전 유통이 실패하고 은병만이 보급되던 상황에서, 원 간섭기 이후 전개된 특권세력과 대상인 중심의 대외무역 발달, 역대매의 성행은 은병이 가진 화폐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다. 특히 충혜왕대 소은병의 제조와 보급은 은병의 명목가치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국가가 다시 화폐권을 주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국가의 노력은 실패하고 민간 교환경제에서는 오승포 등 각종 포화가 기준 통화로 널리 통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은전주조론은 국가재정 고갈에 대한 대안이자 화폐 주조를 통해 국가가 이권을 확보하려는 화권재상 이념이 추구된 방편이었다. 소액인 은전을 주조하여 기존의 은병에서 발생한 교역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반민을 은화 통용권으로 포섭하여 국가 경제력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원 간섭기 이후 국내에서 은병과 원의 보초(寶鈔)가 유통되던 상황에서 재부를 장악하던 이들은 친원세력과 대외무역종사자들이었다. 은전주조론은 국가가 당시 유통계를 재편하여 친원 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경제운영권을 회수하고자 한 의지 또한 담고 있었다.⁵⁶⁾

55) 화권재상은 화폐의 주조와 유통을 국가에서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朴平植은 공민왕대 화폐 논의와 방사량의 상소에서 나타나는 화권재상 이념을 정리하고, 고려 말의 사회경제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자 했던 화폐론과 화폐정책을 화권재상 이념으로 정리하였다. 박평식, 「고려 말기의 상업 문제와 구폐논의」, 『역사교육』68, 1998 ;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연구』, 지식산업사, 2018.

56) 전병무, 앞의 논문, 1999.

은전주조론의 주된 내용은 ① 고려 화폐의 역사와 ‘화권재상’을 강조하고, ② 은전 주조의 방법과 합리성을 주장하며, ③ 은전 주조에 필요한 은을 확보할 방법과 ④ 보조화폐를 사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은전주조론의 주장자들은 공민왕 4년과 6년에 간관으로 재직중이던 이색(李穡), 이강(李岡) 등과 같은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한편 관료 방사량(房士良)은 추포의 유통을 금지하고 관 주도로 화폐를 주조하며 저화(楮貨)를 사용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공양왕 4년(1392)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저화를 인쇄하였다. 이 당시 인쇄된 저화는 여말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중단되어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최초로 지폐제를 선택하고, 이 지폐가 실제 인쇄되어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저화제가 채택된 배경은 동서무역 및 동아시아 경제의 흐름과도 연관된다. 서역 상품과 중국의 견직물 교환이 주종을 이루던 무역에서 10세기 이슬람 세계의 은 부족 현상으로 중국의 은 역시 매출품목이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은 유출이 시작되어 송·원 시기에는 은이 품귀해지고, 그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중국의 수요에 따라 구리와 은이 유출되면서 지폐인 저화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⁵⁷⁾

기존 논의들에서는 고려 은의 유출에 대해 이 시기 원의 징발과 고려의 진헌(進獻), 무역 역조(貿易逆調)와 함께 외래 통화 즉 원 보초의 유입을 거론하여 왔다. 원 간섭기에 고려의 경제가 원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원의 보초가 유입되고 그 보초와의 교환으로 은이 다량 유출되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원 보초가 고려에 유입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고려 내에서의 유통 규모 역시 부진했다고 지적하는 연구 성과가 나온 바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⁵⁸⁾

이러한 논의에서는 실제 고려의 은 유출이 원초(元鈔)와는 무관하여 원

57) 이태진, 「한국 사회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유교사학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58) 이강한, 「고려 후기 元寶鈔의 유입 및 유통실태」, 『韓國史論』46, 2001.

초가 실제 고려 경제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종래 현물 통화로 사용되던 포화가 정량화폐화되면서 고려사회의 주요 통화로 부상하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원의 보초는 지폐 활용의 단초로서 저화폐 수용에 일조한 의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저화가 채택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은의 부족 및 동전보다 저렴한 발행비용 때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원 간섭기에 유통된 화폐들에 대한 연구와 고려시기 유통경제를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⁵⁹⁾

59) 고려 내 원초의 유입과 유통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소략하게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이능식, 「여말선초의 화폐제도」, 『진단학보』16, 1949 ; 김병하, 앞의 논문, 1972 ; 남부희, 「조선초기 저화 유통과 상공업연구」, 『경남사학』2, 1985 ; 전병무, 앞의 논문, 1992 ; 위은숙, 「원간섭기 대원무역 - ‘노걸대’ 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4, 1997 ; 이경록, 「고려시기 은폐제도의 성립과 운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2>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고려시기)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第一節 肅宗朝以前 第二節 肅宗朝以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종조를 기점으로 구분한 2절 체제 · 다양한 화폐가 발전과정을 겪었으나, 조세·공납은 모두 현물로 이루어졌으므로 화폐가 광범하게 이용되지 못함을 지적함. · 제1절 숙종조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도래전, 철전 등 발굴된 각종 유물을 기초로 소개함. - 고분에서 출토된 중국전 중 졸렬한 것이 있음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위조·모방했을 가능성을 제시함. - 당시의 상거래를 특수층의 중국전 이용과, 일반층의 물물교환의 이중구조로 파악함. 당시의 주전은 시험용이었다고 판단함. · 제2절 숙종조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 대은병, 쇠은, 원 보초, 소은병, 표은, 저화 소개 - 의천의 주전론을 주요하게 다룸. - 문헌 상 등장하는 해동통보 소개 -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6종의 동전이 고분에서 출토됨에 주목함. - 주조한 동전을 통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반 백성은 빈곤하여 포곡류를 이용한 물물교환을 하였다고 분석함. - 원 보초의 경우 경중등지(京中等地)에서만 사용되고 유통은 부진
『증보 한국화폐사』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판과 동일한 내용이며 한자와 국문이 병기되는 체제로 변화함.
『한국의 화폐』 (1982)	<p>제1절 교환경제 및 교환수단 제2절 철전의 구조 제3절 동전의 발행과 유통 제4절 은화의 발행과 유통</p>

	주요 내용
	<p>제5절 저화의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서술 내용이 화폐 자체에 대한 소개였는데 비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화폐의 유통 사정을 상세히 서술함. · 각 절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초반에 서술함. · 고려 사회 경제 구조의 미숙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자족의 농업 기본 사회 - 상업은 개경 시전을 제외하고, ‘넓은 터에서 물물교환하는 정도’ · 대내외 교환거래가 이루어져 각종 금속화폐가 등장하는 발전기로 규정 · 철전 주조 이후 전화(錢貨) 통용을 강행하던 정책을 철회하고 전포겸용책(錢布兼用策)을 채택함. · 속중시대의 교환경제를 은병과 해동통보를 사용하는 상층부, 곡화·포화를 사용하는 하층부(일반민)로 구분함. · 철전과 동전 모두 유통계에서 사라지고 곡화(穀貨)·포화(布貨)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되돌아감. · 은병, 쇠은, 소은병, 은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용에 더하여 은화의 유통 사정과 기능을 상세히 소개 (예: 쇠은 주조 시 동전의 합주를 금지한 조치가 무효했던 것 등) · 고려에 유입된 중국화폐의 영향으로 저화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파악(연구성과의 반영) · 저화 인쇄 후 유통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이성계 일파의 계획적인 방해를 원인으로 분석함.
『한국의 화폐』 (1994)	<p>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제2절 철전의 유통 제3절 동전의 유통 제4절 은화의 유통 제5절 저화의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배경을 다른 내용을 하나의 절로 다루어 독립시킴. · 체제 구성에는 변화가 보이나, 고려사회의 경제적 모습에 대한 묘사 등 구체적 내용은 초창기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고려의 상업은 ‘넓은 터에서 물물교환하는 정도’

이와 같은 검토를 기반으로 기존 『우리나라의 화폐』의 서술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시기 화폐의 구조와 유통 사정에 대한 서술에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긴밀히 서술해 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의 내용은 철전, 동전, 은화(은병, 쇠은, 소은병), 보초와 저화 등 각종 화폐들을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화폐가 나온 배경과 유통 사정 역시 산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 화폐들을 국가의 화폐정책 및 교환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계통적으로 서술한다면 화폐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기마다 화폐 소개에 앞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술해 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서술 전반에 최신 연구 성과의 반영이 필요하다. 서술된 각 항목들은 비교적 1980년대까지 초창기 연구 성과만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숙종 대 동전의 구조에 대해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은 반영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경영과 교환 상의 편민(便民) 추구라는 관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온 데 비해 각종 은화에 대한 서술 역시 소략하다. 무엇보다 고려시기 경제의 구조나, 원 보초의 유입이 저화에 미친 영향 등 초기 연구성과에 따라 서술되어 오늘날 반론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으므로 최신 연구 성과를 서술 내용에 반영하거나 소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품화폐에 대해 독자의 절을 두거나 비중을 늘려 서술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화폐들은 유통이 부진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중에도 추포, 오승포 등의 물품화폐가 민간 교환경제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교환의 매개로서 그 위상을 높여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물품화폐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민간 상업에서 활발히 이용되던 화폐들에 대하여 함께 서술해야 할 것이다.

5. 전망과 제언

1. 이상 검토해본 바와 같이 고려시기의 화폐에 관한 연구는 각 화폐의 구조와 유통 등 개별 구체적인 사안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고려시기의 화폐제도를 시공간적 구조에서 종합으로 살피는 작업은 미진한 편이었다. 역사 속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이라는 큰 체계 속에서 고려의 경제상황과 화폐 사용을 살피는 동시에 은을 이용한 동아시아 국제 교역망 및 대중국무역이 끼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려 말 등장하는 각종 화폐 개혁론은 이후 조선 국초의 저화 및 동전 보급정책과도 맞물려있다. 여기에는 당시의 국가 경영 및 경제 인식의 측면, 즉 ‘화권재상’의 이념이 표방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자가 연결되는 맥락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고려 초기 각종 화폐 정책이 삼국 및 남북국시대의 경제상과 어떠한 연결점을 갖는지도 관찰해야 할 것이다.

3.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의 화폐 유통이 부진하였던 원인으로 고려 경제의 미숙성을 주된 원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 차용해 온 힐데브란트의 전통적 화폐발달론이 과연 고려시기의 화폐경제를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상과 형성과정이 현격히 다른 유럽세계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4. 그간 고려시기의 경제상은 은을 매개로 교역하는 상류층과 포·미를 이용한 일반 민인층의 경제구조로 구분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한 사회의 경제활동이 두 개의 층으로 완전히 단절·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분과 권력에 따른 불법·탈법적 교역이 행해지던 시대라는 점

을 감안하면, 상층부의 교역은 하층부의 경제 상황이나 국가 재정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 상업의 제반사정과 화폐 유통을 살펴본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려 말 민인들의 상거래에서 화폐로 활발히 기능한 ‘포화(布貨)’에 대하여서도 단순한 현물화폐로 치부하기보다 화폐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IV. 조선전기

1. 조선초기의 화폐정책과 화폐유통

조선전기 화폐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제도사적 측면에서 국초의 화폐정책을 다루면서⁶⁰⁾ 조선초기 화폐정책의 배경으로 고려말의 화폐문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였다. 곧, 원 간섭기 이래 대원무역 등을 통한 은 유출이 증가하면서 은병을 주조하기 위한 은이 부족해지고 민간에서 사(私)화폐인 쇠은이 널리 유통되자, 고려 정부는 화폐에 대한 국가 관리를 회복하기 위해 충혜왕 원년(1331) 소은병을 주조, 보급하고자 하였다. 소은병의 보급은 기존의 은병이 지나치게 고가의 화폐라 민간에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였지만, 재료인 은의 부족과 악화(惡貨) 주조, 도주(盜鑄) 등 문제로 인해 실패하였고 결국 고려말 저화의 발행으로 귀결되었다.⁶¹⁾ 저화의 발행은 경제력이 전적으로 붕괴된 당시 정부가 발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화폐의 종류가 저화였다는 점, 이전에 원(元) 보초(寶鈔)를 유통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었다.⁶²⁾

조선에서는 태종 원년(1401) 사섬서(司贍署)가 설치되면서 저화 보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태환보증책의 불비

60) 이능식, 「여말선초의 화폐제도(一)」, 『진단학보』 16, 1949; 宮原兪一, 「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 『朝鮮學報』 2, 1951; 「朝鮮初期の楮貨について」, 『東洋史學論集』 3, 1954; 이종영, 「조선초 화폐제의 변천」, 『인문과학』 7, 1962.

61) 이능식은 저화의 발행을 ‘려조적(麗朝的)인 것의 비려조적(非麗朝的)인 것으로의 전환’으로 보았다. 고려 성립의 물적 조건은 대토지 소유와 금은 집중이었고 왕실은 은병의 주조를 통하여 그러한 경제력을 유지하였는데, 고려말 은병을 주조하지 않고 저화를 발행한 것은 이제 왕실이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려-은병-귀족성’ 대 ‘조선초-지폐-서민성’의 구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이능식, 위의 글, p.155).

62) 이처럼 조선초기 저화 발행을 고려말 원의 보초 경험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곧, 화폐가 유통되기 위한 내부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화폐가 소개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유현재, 「조선초기 화폐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저화유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9, 2009, 註2). 이와 관련하여, 이강한은 원 보초의 유입·유통 수준이 종래의 견해와 달리 부진하였고 그나마 유입된 물량도 국외로 재반출되었기 때문에, 원 보초의 유입·유통이 고려의 통화 질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 실태」, 『한국사론』 46, 2001).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동왕 3년(1403)에 철회되었으며, 동왕 10년(1410) 5승포 사용에 대한 금령과 함께 다시 추진되었다가 역시 저화 유통이 부진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태종이 민간의 불신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화 보급 정책을 재차 추진한 것은 ‘이권재상(利權在上)’, ‘화권재상(貨權在上)’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⁶³⁾ 다만, 그것이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와 화폐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저화 자체의 크기 및 종이 질 문제, 소액거래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명목가치 또한 저화 유통의 방해물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저화는 국가에 상납하는 각종 세금이나 관리의 녹봉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용되었다.⁶⁴⁾

이처럼 태종조 저화 보급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당시 경제수준의 미숙과 화폐에 대한 민간의 인식 부족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태종조 저화 보급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경제수준이 교환경제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려말 성행한 교환경제가 조선초 억상책(抑商策)에 의해 자연경제로 회귀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억상책을 추진한 조선의 관료들 또한 본업인 농업의 침체를 우려하여 억상책을 실시한 것일 뿐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상공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초 국내 상업 및 대외(밀)무역이 억상책에도 불구하고 성행하였다는 점은 실제 자료상에서 확인되는 바이며, 특히 고려 이래 민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추포(麤布)가 교환수단으로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경제수준이 법화

63) 집권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화폐를 발행한 것은 조선만이 아니었다. 서양의 화폐연구자인 폴 아인찌히 또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써 조직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지배자가 정치권력을 유지·강화·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전수병, 「조선 태종대의 화폐정책 - 저화유통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0, 1983, p.37).

64) 권인혁, 「조선초기 화폐유통 연구 - 특히 태종대 저화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32, 1982(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에 수록); 권인혁, 「15세기 화폐유통 시도와 그 배경」, 『국사관논총』 30, 1991.

가 유통될 수 있는 교환경제에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화의 유통이 실패한 까닭은 정책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환전과 환물을 담당하는 기관이 충분치 않았다. 한성과 개성에 화매소(和賣所)가 설치됐으나 지방에서는 각 관부가 환전·환물 업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 저화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더욱이, 정부는 저화의 완전한 태환을 보장하지 못했다. 정부가 공급한 저화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전량 태환은 불가능했으며, 저화 보급을 포기한 후에도 민간 보유 저화에 대한 보상책은 없었다. 이러한 정책의 비합리성과 더불어, 저화가(楮貨價) 설정이나 포화 사용에서 정책의 비일관성 또한 저화에 대한 민간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였다.⁶⁶⁾ 이에 저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여 저화가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는” 무용지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한편, 태종조에는 소액거래의 편의를 위해 동전을 주조하여 발행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종 말년 대기근이 발생함에 따라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여 동전 발행은 보류되었고, 세종 4년(1422)부터 다시 발행 논의가 시작되어 동왕 6년(1424) ‘조선통보’가 발행되었다. 정부는 전가(錢價)를 법정하여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동전 불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동전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발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가치마저 하락하여 민간에서 동전 사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동전의 발행량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보다 재료인 동의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⁷⁾ 동전의 보급은 저화의 경우와 달리 원료인 동의 확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초기 화폐유통의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제수준 전반의 미숙성을 지적하는 견해와 함께 화폐정책 자체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반면, 전근대에 유통되었

65) 전수병, 앞의 글, 1983.

66) 위의 글.

67) 이종영, 앞의 글, 1962.

던 화폐와 근대에 유통되는 화폐의 성격 차, 역할 차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화폐유통의 수준만으로 전근대 사회의 교환경제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오늘날 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란 ‘물품화폐 - 금속화폐 - 명목화폐’ 순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후의 화폐가 이전의 화폐를 ‘대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화폐의 ‘발달’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전근대 사회에서 화폐유통은 위의 발달 과정과 달리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국가가 발행한 화폐와 별개로 상인들이 시장에서 수요에 맞게 유통하는 화폐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초기 저화와 동전의 유통이 저조했던 까닭은 명목화폐로서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쌀과 포는 해당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석지자(朝夕之資)’의 가치를 지녔기에 명목화폐로 대체되지 않는 고유의 유통 영역을 유지하였다.⁶⁸⁾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조선초기 화폐에 관한 연구가 제도사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화폐정책의 추진 과정 및 결과, 특히 실패 원인의 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폐 유통 실패의 주원인을 무엇이라 여기든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일방성과 강제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다시 말해, 당시 교환경제가 미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화폐정책 자체에 미비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화폐정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초점이 이 같이 설정됨에 따라 정부가 화폐 정책을 추진한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권재상’, ‘화권재상’의 이념 속에 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려 했다는 점은 언급되었지만⁶⁹⁾ 그러한 이념이 실제 화폐 논의와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하였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화폐정책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화폐인식과 화폐론, 나

68) 유현재, 앞의 글, 2009.

69) 須川英徳, 「高麗末から朝鮮初における貨幣論の展開-専制國家の財政運用と楮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7; 「朝鮮前期の貨幣發行とその論理」, 『錢貨-前近代日本の貨幣と國家』, 青木書店, 2001.

아가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구상 속에서 이해할 때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초 이래 국가의 화폐정책은 화폐 발행을 통해 국용을 보충하고 민생을 편리하게 한다는 유교 전래의 화폐인식에 기초하였다. 고려후기에서 최말기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화폐론과 화폐정책은 크게 두 계통으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국가발행 본위화폐로 저화와 동전을 발행하되 민간 통용 5승포를 官認과 收稅의 절차를 거쳐 보조화폐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국가가 저화와 동전을 발행하되 5승포와 포화의 유통을 전면 금하는 것이다. 조선초기 화폐정책은 이 중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국왕과 국가가 독점하는 ‘화권(貨權)’은 조폐권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으며, 신왕조 개창 이후 농업과 상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원칙으로 설정된 ‘무본억말(務本抑末)’ 이념과 짝하여 하나의 경제 운영론으로 관철되었던 ‘이권재상’의 바로 그 ‘이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⁷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초의 저화·동전 보급 정책이 실패한 것은, 고려 후기 이래 전개되어 오던 민간 포화경제의 성숙을 ‘이권재상’에 근거한 국가정책의 집권성이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러한 국가권력에 맞서 상권과 자산의 변동을 초래할 국폐 발행을 저지하고 포화에 근거한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통구조와 상인층의 존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국초 정부의 화폐인식과 화폐론 또한 조선전기 내내 동일한 형태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후반 교환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국왕과 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폐인식과 화폐론이 나타나고 있었다. 세조 4년(1458)에는 마침내 저화와 함께 포화의 통용을 공인하기에 이르렀고, 세조 조에 편찬된 『경국대전』에도 저화와 함께 5승포와 3승포가 ‘3등 국폐’로 규정되고 있었다. 여기에 ‘조선통폐’의 관인과 1/20세 규정이 추가

70) 박평식, 「조선전기의 화폐론」, 『역사교육』 118, 2011(박평식,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연구』, 지식산업사, 2018에 수록). 조선왕조의 경제이념으로서 ‘무본억말’과 ‘이권재상’에 관해서는,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9; 박평식, 『조선전기 교환경제와 상인연구』, 지식산업사, 2009를 참고.

된 것이 성종조 『경국대전』에 실린 조항이다. 이후 중종조에 이르면 이제 화폐 발행을 통하여 국부를 도모하고 국용을 보충한다는 인식보다, 민간 교환경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인식이 화폐 통용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국초 조선 정부의 화폐정책이 결국 포화의 통용을 공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사실로부터, 당시 포화경제의 성숙 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16세기의 포화유통과 ‘추포(麤布)’

조선초기 국가가 발행한 저화·동전의 유통이 저조한 가운데 포화는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면, 시중에서 통용되는 면포의 품질이 크게 떨어져 3승포·2승포에 이르고, 것처럼 실용성이 없는 면포조차 화폐처럼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연구들은 2승포를 ‘반(半) 물품화폐’로 명명하고 그 유통을 정상적 화폐제도 확립의 저지 요인으로 보았다.⁷¹⁾ 그러던 가운데, 16세기 2·3승포의 통용을 당시 교환경제의 성장과 관련짓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16세기 지주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몰락한 외방의 빈농들이 경중으로 집중되면서 새로운 상업 영역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빈농들의 소량 구매에 적합한 소액 화폐가 필요해졌다는 주장이었다. 처음에는 정포(正布)인 5승포를 잘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3승포·2승포를 짜서 사용했는데, 5승포와 3승포의 비가(比價)는 1:2, 5승포와 2승포의 비가는 1:3으로 설정되었다. 2·3승포의 등장은 단순한 품질 저하가 아니라 화폐교환 범위의 ‘하향적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⁷²⁾

위 연구를 시작으로 5승포는 물론 2·3승포까지도 화폐의 일종으로 보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5승포와 2·3승포의 ‘이중 유통’을 당시 대외무역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연구도 등장했다. 곧, 16세기 일본에서 면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선의 면포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었으며, 조선 내 면화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포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조선에서 수출용 양포[良布, 5·6승포]와 국내 유통 惡布[악포, 2·3승포]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일본과 달리 조선에서 면포가 주로 유통된 것은, 화폐 유통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세가 및 부상대고(富商大賈)가 대외무역의 주요 상품이자 결제 수단이었던 면포를 선호했기 때문이다.⁷³⁾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71) 김병하, 「이조전기의 화폐유통 - 포화의 화폐기능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2, 1970; 유자후, 『조선화폐고』, 이문사, 1974; 송찬식, 『이조의 화폐』, 한국일보사, 1975.

72) 송재선,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섭 박사 화갑 기념 사학 논총』, 1986.

17세기 중반 상평통보가 보급되기 전까지 면포가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규격이 正布에 미치지 못하는 ‘추포’를 소액화폐로 규정하였다. 성종 24년(1493) 『대전속록』에 규정된 정포의 규격은 5升(1升=80올), 35尺(길이), 7寸(너비)이었으며, 규격이 정포에 미치지 못하는 면포는 ‘승추척단(升麤尺短)의 면포’ 곧 ‘추포’로 불렸다.⁷⁴⁾

비교적 최근에는 국초와 16세기에 각기 언급된 ‘추포’의 실체를 밝힌 연구도 이루어졌다. 국초 교환경제에서 통용된 포화 가운데 ‘정포’란 ‘정오승포’로도 불리는 5승 마포였으며, 법으로 정한 5승 35척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5승 마포는 ‘상포(常布)’ 내지 추포로 불렸다. 그러나 세종조 후반 조선에서 면작(棉作)이 확산됨과 아울러 면포가 기존의 상포를 대체하였다. 다시 말해, 16세기에 널리 확산되었다고 하는 ‘추포’는 고려 말이나 국초와 같은 마포가 아니라, 5승 35척의 정면포에서 승추척단화가 진행된 다양한 추악면포를 지칭하였다. 추포에는 3승 35척의 면포로서 16세기 국가에 의해 그 유통이 공인된 상목면(常木綿), 곧 상목(常木) 외에도 2승포, 단사포(單絲布), 2~3단으로 단할되어 10여 척으로까지 유통되던 척단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⁵⁾

이처럼 16세기 들어 ‘새로운 추포’가 등장함에 따라, 포화체계 또한 다음 <표 3>과 같이 변화하였다. 아래에 적힌 숫자는 포화 간의 비가(比價)이다.

73) 이정수, 「16세기 면포유통의 이중화와 화폐유통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25, 2003.

74) ‘악포’는 본래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포를 뜻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추포는 좀 더 지칭하는 범위가 좁아서 승수가 기준에 모자랐던 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에는 ‘승추(升麤)’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유현재, 「16세기 추포 유통과 그 성격」, 『한국사론』 52, 2006, 74쪽의 註3).

75) 박평식, 「조선초기의 화폐정책과 포화유통」, 『동방학지』 158, 2012.

<표 3> 국초-16세기 화폐 간의 비가

국초	5승 면포 [正木]	정5승 마포 [正布]	5승 마포 [常布]	
	1	2	4	
16세기	5승 면포 [正木]	정5승 마포 [正布]	3승 면포 [常木]	그 외 다양한 추포
	1	2	2	4

16세기 추포의 유통량이 늘어난 원인과 관련해서는, 소액화폐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거듭된 흉년으로 인해 또 다른 교환수단인 쌀의 공급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 추포는 교환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액화폐가 필요하게 되어 유통되었던 것이 아니라, 미곡 유통량이 부족했던 시기 도성에서 임시방편으로 통용된 현물화폐였을 뿐이라는 것이다.⁷⁶⁾ 양반가의 생활일기류를 바탕으로 16세기 중반~18세기 초 화폐유통 실태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상품을 거래할 때 도성에서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은화(약 46%)와 면포(약 25%)를 사용한 반면, 지방에서는 쌀(약 34%)과 면포(약 21%)를 사용했다고 한다.⁷⁷⁾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볼 때, 당시 소액 거래에서 주요 결제 수단은 기존의 이해와 달리, 추포가 아닌 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다른 연구는 이들 자료가 양반가의 일상 기록임을 전제하고 사례의 절반 정도가 임진왜란에 따른 피란 상황 아래 이루어진 거래였음을 고려하면, 두승의 곡물을 이용하는 소액 거래의 형태를 포함하여 3승 이하의 승추척단의 면포가 도성과 외방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교환경제에서 활발하게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던 사정을 추론할

76) 유현재, 위의 글.

77) 李正守, 「16세기 중반~18세기 초의 화폐유통 실태 - 生活日記類와 田畝賣買明文을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報』 32, 2005(이정수·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수록).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쇄미록』에 나타난 도성에서의 ‘기타’ 지불 수단의 경우, 모두 은이나 은과 미·포를 함께 지불한 경우인데, 이는 명군의 참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개된 도성 내의 銀 유통 사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토지매매명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답 매매, 곧 고액 거래에서도 등가 기준으로는 과반 이상이 추포인 상목으로 설정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민간 교환경제에서 상목을 비롯한 추포가 기준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실정을 ‘추포경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7세기 명목의 화폐경제인 금속화폐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⁷⁸⁾

요컨대, 16세기 면포/추포의 화폐기능에 대한 인식은 17세기 상평통보의 전면적 보급 이전 조선의 화폐경제 단계 설정에 있어 관건이 된다. 간단히 말해, 추포를 ‘(반)물품 화폐’로 보느냐 혹은 ‘(준) 명목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조선의 화폐경제 단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기 ‘추포경제’가 ‘화권재상’의 국가 화폐정책을 민간 상업이 극복하면서 도달한 포화유통 단계임을 고려한다면, 조선전기 교환경제의 실상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

78) 박평식, 「朝鮮前期의 麤布流通과 貨幣經濟」, 『역사학보』 234, 2017.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4>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조선전기)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第三章 李朝時代의 貨幣 李朝布貨의 變遷</p> <p>第一節 太祖~太宗朝間 國初의 貨幣, 楮貨發行, 朝鮮通寶 發行計畫</p> <p>第二節 世宗~光海君間 世宗代의 楮貨 流通事情, 朝鮮通寶(眞書體)의 發行, 朝鮮通寶 鐵錢, 楮貨複用, 箭幣[八方通貨], 用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에 따른 구성 (태조~태종, 세종~광해군 ...) -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구분 없이 국왕 재위 기간을 기준으로 시기를 설정하였으나, 시기 구분의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제1절 앞에는 ‘이조포화의 변천’ 항목을 단독으로 설정하여, 고려말부터 조선 성종대까지 포화의 변천 과정을 개관함 · 전체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초한 제도사적 서술 · 제1절 : 태종조 저화 보급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화폐에 대한 민간의 인식 부족을 지적, 태종조 ‘조선통보 발행계획’ 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유자후 저 『조선화폐고』의 태종 15년 조선통보 주조說을 부정 · 제2절 : 세종조 조선통보의 발행과 관련하여, 재료인 銅의 부족 현상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세종조 철전 주조 시도까지 언급, 세조조 국왕이 주조를 명한 전폐와 임진왜란 중 명 군이 반입한 은화 또한 언급

	주요 내용
『증보 한국화폐사』 (1969)	<p>제3장 이조시대 제1절 태조~태종조간 국초의 화폐, 저화발행, 조선통보 발행계획</p> <p>제2절 세종~성종조간 세종대의 저화 유통사정, 조선통보(진서체)의 발행, 조선통보 철전, 저화복용(複用), 전폐 “팔방통화(八方通貨)”</p> <p>• 『한국화폐사』(1966)와 거의 동일 • 시기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됨 (태조~태종, 세종~성종 …) • 제1절 앞의 ‘이조포화의 변천’ 항목 삭제 (퇴보) • 제2절 마지막 항목 ‘용은(用銀)’ 삭제</p>
『한국의 화폐』 (1982)	<p>第3章 朝鮮時代 第1節 朝鮮前期의 貨幣發行과 流通</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布貨의 活用 2. 楮貨의 發行과 流通 3. 朝鮮通寶의 發行과 流通 4. 箭幣(八方通寶)의 鑄造 <p>• 화폐의 종류에 따른 구성(포화, 저화, 조선통보, 전폐)으로 변화</p> <p>• 제1절 제1항 : 추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추포의 품질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시기를 연산군대로 파악</p> <p>• 제1절 제2항 : 우리나라에서 지폐인 저화가 금속화폐보다 먼저 등장한 까닭과 관련하여 부족한 금속 축적량과 명에 대한 조공 사실을 지적, 저화 보급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책의 비합리성과 비일관성을 지적</p> <p>• 제1절 제4항 : 전폐 발행에 대하여 ‘명목화폐’에서 ‘물품화폐’로 화폐정책운용상 퇴보가 나타났다는 의미 부여</p>

	주요 내용
『한국의 화폐』 (1994)	<p>第3章 朝鮮時代</p> <p>第1節 朝鮮前期의 貨幣流通</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社會·經濟的 背景 2. 布貨의 流通 3. 楮貨의 流通 4. 銅錢의 流通 5. 箭幣의 流通 試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의 종류에 따른 구성 유지, 다만, ‘사회·경제적 배경’ 이라는 항목을 첫 항목으로 새롭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경제단계를 ‘원시자연경제’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쌀과 포 등 ‘물품화폐’ 중심의 유통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서술, 정부는 이러한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 제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저화, 동전의 통용을 시도한 것으로 설명됨 - 이러한 ‘명목화폐’ 보급 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조선정부의 화폐론인 ‘화권재상’ 론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중국의 영향도 언급됨 · 제1절 제3항 : 태종조 저화 보급 정책을 고려말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서술 등장, 저화·동전 보급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1670년대까지는 물품화폐와 은화가 화폐기능을 담당하였다고 언급 · 제1절 제4항 : 앞과 마찬가지로, 은화와 관련한 독립 항목은 없으나 물품화폐와 은화가 실질적으로 유통되었다고 언급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전기 화폐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화폐』(2015) 제3장 <조선의 화폐> 제1절 <조선전기> 편(18~26쪽)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먼저 구성상의 문제이다. 해당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2. 물품화폐: 포화 및 전폐 (1) 포화 (2) 전폐

3. 명목화폐: 저화 (1) 태종 (2) 세종 (3) 세종 이후 16세기 후반까지

4. 금속화폐: 은화 및 동전 (1) 은화 (2) 동전 - 태종, 세종, 세종 이후 16세기 후반까지

개요를 제외한다면, 1. 물품화폐, 2. 명목화폐, 3. 금속화폐라는 화폐발달 단계상 유형에 따라 범주를 구성하고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화폐의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특정 시기에 사용되었던 화폐의 종류와 특징을 백과사전식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조선 건국에서부터 양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간 정부의 화폐론 및 화폐정책, 그리고 실제 화폐유통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조선전기에 통용된 화폐는 ‘반 물품화폐’, ‘준 명목화폐’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물품화폐, 금속화폐, 명목화폐로 범주화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화폐발달 단계이론에 따라 단선적으로 발달한 것도 아니었다. 논자에 따라 저화·동전 겸용, 저화·포화 겸용, 동전·포화 겸용 등 다양한 화폐 겸용론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었다가 폐지되기도 했다. 유형별 구성 방식은 이처럼 다양한 화폐가 상호작용 속에 존재했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며, 기왕의 화폐이론에 맞지 않는, 새로운 화폐사 인식이 개입될 여지를 거의 남겨주지 않는다.

현재의 구성 방식은 당시 사용되었던 여러 화폐의 비중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정부가 국가 재정 체계 등을 통해 보급하려 한 화폐는 저화·동전이었고, 실제로 민간 교환경제에서 통용된 화폐는 포화였다. 다시 말해, 조선전기 화폐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폐는 저화와 포화, 동전 세 가지

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화폐, 예컨대 세조가 주조를 제안했으나 실제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전폐[화살촉 모양의 철전]나, 임진왜란 중 명군이 반입하였던 은화를 앞의 세 화폐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문제이다. 이 절에서 조선전기는 화폐사상 ‘과도기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물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추진된 여러 정책들은 고려말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과도기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조선전기 전체를 ‘과도기’로 표현하는 것은, 해당 시기를 그 시기 자체가 아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후기의 예비 단계로만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수준을 부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조선전기를 나름의 질서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전기의 명목화폐를 ‘초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평가를 담은 표현들은 조선전기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속에 조심스럽게 쓰여야 한다.

4. 전망과 제언

1.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화폐』는 지금까지 조선전기 화폐사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개략적으로나마 충실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세부 사실의 기저에 깔린 경제 이념이나, 그 배경·요인이 되는 경제적 변화, 시기 구분 등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전기 화폐를 현행과 같이 유형과 종류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시간 축을 중심으로 화폐경제의 변화를 계기적으로 서술하고 전체 경제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서술이 요구된다.

2. 조선전기 중에서도 15세기 후반~16세기 이후는 화폐사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지주제의 발달과 장시의 등장 등으로 대변되는 교환경제의 발달은, 정부의 화폐론 및 화폐정책에 변화를 불러오는 한편 화폐교환 범위를 확장하여 소액화폐로서 추포가 널리 유통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선전기 화폐사를 정리할 때에도 16세기를 하나의 기점으로 설정하여 전후 시기 화폐경제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전기 화폐경제를 좀 더 넓은 경제 정책, 경제 이념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예컨대, “조선 초기부터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였으나, 당시 널리 유통되던 곡물, 직물 등의 물품화폐로는 충분하지 않을 만큼 교환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저화와 같은 명목화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는 문장에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나타난다. 조선 정부가 국초부터 ‘상공업을 억제’ 했다는 표현과, ‘물품화폐로는 충분치 않을 만큼 교환경제가 발달’ 했다는 표현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후술되는 이권재상, 화권재상의 이념과도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은 국초의 경제 이념인 ‘무본억말(務本抑末)’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야 해결될 수 있으며 화폐정책의 변화 또한 좀 더 넓은 경제 정

책, 이념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4. 조선전기 추포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포의 화폐기능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추포를 쌀과 함께 ‘물품화폐’로 보는 시각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추포를 ‘(준) 명목화폐’로 보아 추포가 교환경제에서 기준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던 실정을 ‘추포경제’로 표현하고, 이를 17세기 명목화폐(금속화폐) 경제를 향한 진입 기반으로 파악하는 등 조선전기 추포사용과 추포유통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조선전기 화폐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 ‘추포경제’가 ‘화권재상’의 국가 화폐정책을 민간 상업이 극복하면서 도달한 포화유통 단계임을 고려한다면, 조선전기 교환경제의 실상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다.

5. 포화, 저화, 동전 외에 은화와 전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요구된다. 특히, 은화의 경우에는 16세기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이자 교역품으로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동아시아 차원에서 은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은이 수행한 화폐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포화, 저화, 동전에 비해 은화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그 비중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연구가 진전되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연구 성과 위에서 기타 화폐는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시기별 구성에서 관련 시기에 한해 소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독자들이 화폐의 비중을 파악함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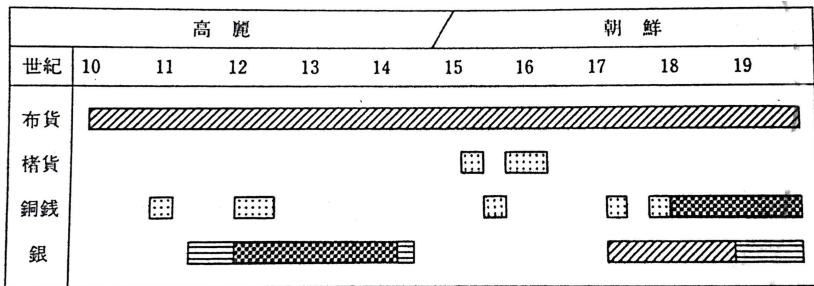
79) 須川英徳은 <고려·조선시대의 화폐사용사정>이라는 표에서 은화의 사용 비중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범주는 순서대로 1) 국가에 의한 인쇄·주조, 널리 유통됨, 2) 국가에 의한 인쇄·주조, 일부에서만 유통됨, 3) 국가에 의해 제조되지 않고, 널리 유통됨, 4) 국가에 의해 제조되지 않고, 일부에서만 유통됨이다(須川英徳, 「朝鮮時代の貨幣」, 『歴史學研究』 711, 1998, 29쪽).

6. 조선전기 동전 보급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주로 재료인 동의 부족 때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내외 동의 생산과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만하다. 세종조 조선통보를 발행할 당시 정부가 동을 수급하기 위하여 수립, 추진했던 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조선통보가 당대 중국의 동전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정교한 수준이었다는 평을 참고할 때, 당시 수공업의 발달과 관련해서도 조선통보 발행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분량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화폐』에서 조선전기는 다른 전근대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관련 자료 및 연구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전근대 화폐경제, 화폐사에 대한 관념이 분량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발간된 조선전기 화폐경제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분량 또한 적절히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1> 고려·조선시대의 화폐사용사정

☒ 高麗・朝鮮時代の貨幣使用事情



- [Dotted pattern] 国家による印刷・鋳造，かつ，広く流通。
- [Dotted pattern] 国家による印刷・鋳造，かつ，一部でのみ流通。
- [Hatched pattern] 国家による製造なし，かつ，広く流通。
- [Horizontal lines] 国家による製造なし，かつ，一部でのみ流通。

V. 조선후기

1. 은(銀)의 유통과 17세기 행전책(行錢策)

1) 은의 유통과 무역의 성행

은화는 고려시기에 200년 동안 사용되다가 은의 부족으로 고려 말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여말선초에는 명나라에 세공을 바치는 일로 어려움을 겪다가 태종 8년(1408) 은화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래도 은화가 돈이라는 관점이 지속되어 한글 창제 이후에 만들어진 『석보상절』(釋譜詳節)에는 “오백 은(銀) 도나로 다섯 줄깃 연화(蓮花)를 사아” 라고 하여 은화가 돈이라는 관념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조선 전기에는 은화가 국제 무역을 위한 기본 결제 수단이라는 하였어도 국내 교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⁸⁰⁾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및 스페인-포르투갈이 주도하는 대항해시대가 막을 올리자 아시아의 무역체제에 서양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포르투갈 상인들은 신대륙의 은을 가지고 와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향료·비단·도자기·차를 구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남미 대륙에 이어 세계 제2의 은산국으로 부상하여 일본 은의 상당 부분은 왜구들이 주도한 밀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조선 또한 은의 흐름이라는 세계사적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은 유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동아시아 은 무역의 활성화는 기존 조공무역 체제와 충돌을 빚게 되었고 임진왜란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¹⁾ 조공무역 체제와 은 무역을 토대로 점차 왕성해지는 일본의 해상 진출 욕구가 충돌한

80) 국사편찬위원회 편,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참조.

81) 이태진, 「16세기 동아시아 경제 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한상권,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 은 무역을 중심으로」, 『김철준 박사 화갑 기념 사학논총』, 1983 ; 이현창, 「임진왜란과 국제무역」,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15.

결과물이 무역집단-해적집단으로서의 왜구였으며 이것이 임진왜란 발생의 일부 원인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는 명-청의 왕조 교체 상황에서 해적 출신의 상업적 군사세력인 정성공(鄭成功)이 반청운동을 지속하였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주도하던 중-일 중계무역은 네덜란드 상인 축출 이후에 쓰시마번이 주도하는 대조선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의 원인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의 전개과정 자체에서도 전쟁 과정의 은화 유통은 금속 화폐 시대로 전환하는 주된 계기로 작용하였다.⁸²⁾ 임진왜란 과정에서 명군(明軍)이 군대의 식량과 포상을 모두 은으로 지급하니 이로 인하여 은화가 크게 유행하고 은으로 재물의 가치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조 27년(1594)에는 별금과 일부 공과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은화의 유통이 촉진되었다.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재조지은(再造之恩) 문제와 관련된 광해군-인조조의 정치적 상황을 은(銀)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제적 시야 이외에 16세기 이래 국내 상업의 발달도 은 무역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미 15세기 후반 성종조 이후로 전주전객제의 쇠퇴에 따른 지주제의 발전, 사치 풍조의 만연, 장시를 비롯한 국내 상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상업 발전의 다른 한편에서 중국 사치품의 무역이 고려말에 이어서 다시 성행하고 있었으며 대일 무역에서는 일본의 요구와 관련하여 면포와 식량을 수출하고 대중국 결제수단이었던 은을 수입하는 무역활동이 사무역을 중심으로 활발해졌던 것이다.⁸³⁾

전란 이후에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중국의 비단과 명주실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은이 유입되었다. 그 대부분은 비단 등의 결제를 위하여 다시 중국으로 유출되었지만 적잖은 부분이 조선에 남아서 화폐로 기능하였다. 주로 왕실, 관청, 권세가, 상인, 역관들이 가치의 측정·저장 수단 및 거래 수단으로 은화를 활용하였다.⁸⁴⁾ 다만

82) 한명기, 「17세기 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15, 1992.

83) 한상권, 앞의 논문, 1983.

84) 일본으로부터 획득 한 은의 대부분은 중국 비단 등의 결제물로 다시 유출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18세기에 들어서는 일본 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은 재고량은 감소하는 추세였다.⁸⁵⁾ 화폐로서의 은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⁸⁶⁾ 결국 은화는 서울처럼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공물 납부권 매매와 같은 고액 상거래에서 일찍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노비-토지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은화의 유통은 화폐 경제의 일정한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당대인들에게 금속화폐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조선이 동전의 원료인 동철(銅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동전이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은화의 유통과 관련된 연구들은 조선 경제가 서양인들까지 참여한 동아시아 국제 무역체제의 판도 속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조선이 세계 최대의 은 수요자(중국)와 대규모 은 공급자(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⁸⁷⁾ 또한 은화의 유통은 결국 상평통보와 같은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을 국제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후술할 조선 국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외무역에 주목한 관점의 다른 한편에서, 16세기 이래 국내 상업의 발전 또한 활발한 은 무역과 영향을 주

조선 내에 남아서 화폐로서 기능하였다. 은화는 서울과 부연로(赴燕路)를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주로 왕실, 관청, 권세가, 상인 및 역관(譯官)이 이용하였다. 은화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그 유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직전에는 “추포(麤布)의 유통이 두절되어 공사백물(公私百物)의 매매가 오로지 은화에 의존하여, 이를테면 연료, 채소와 같은 보잘것없는 물건까지도 반드시 은화가 있는 연후에 교역할 수 있었다.”(『비변사등록』 숙종 4년 윤3월 24일)고 할 정도로 은화의 유통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일반 농촌에서는 은화가 널리 유통 되지 못하였다. (이현창, 「조선시대 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36, 2011.)

85) 은 유입의 전성기인 17세기 후반에는 중국 비단의 수입이 원활하였지만 18세기부터는 은 유입이 감소하여 비단 소비 금지령(영조22-1746년, 정조11-1787년)이 발동되기도 하였다. (이현창, 위의 논문.)

86) 토지 등의 매매 문서를 통하여 화폐 유통에서 은화의 지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대개 목면(木綿)에서 은화, 동전 순서대로 거래 수단이 활용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06 참조.)

87) 주경철, 「해양시대의 화폐와 귀금속」, 『서양사연구』32, 2005.

고받았다. 이미 조선 전기에 국내 상업의 발전 및 사치 풍조가 나타났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사치품 수입에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은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란 이후에도 중일간의 중계무역의 형태로 나타났다. 은화의 유통은 양난 이후 국가재조(國家再造)의 한 방편이기도 했던 금속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 17세기의 행전책

17세기 초부터 동전 통용 정책, 행전책(行錢策)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선조 36년(1603) 호조에서 주전사목(鑄錢事目)을 마련하였으나 동철의 부족으로 주조하지 못하였다. 광해군-인조조에 걸쳐서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실무에 밝은 김신국(金薰國), 남이공(南以恭), 김세렴(金世濂)을 중심으로 한 북인 관료들이 정치적 연대 속에서 행전책을 추진하고 있었다.⁸⁸⁾ 인조 3년(1625) 동전이 60만 개 주조되었지만 주전량 부족 및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인조 11년(1633)에 다시금 행전책이 추진되었지만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17세기 전반에 전란 및 주전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전책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동전 유통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갔다. 인조 12년(1634) 개성에서는 “크게는 토지-가옥으로부터 작게는 뽕감·채소·과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전으로 사고 있었으며 부근의 강화(江華)·교동(喬桐)·풍덕(豐德)·연안(延安) 사람도 동전을 사용하는 품이 아이도 장에서 물건을 매매함에 속지 않을 만큼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⁸⁹⁾ 이에 힘입어 최명길(崔鳴吉)·김육(金瑬) 등은 동전의 유통을 개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육은 효종의 절대적 신임을 토대로 강력하게 행전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효종 1년(1650)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자신의 노자로 동전 15만 개를 사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통용할 만하거든 즉시 동전을 주

88) 신병주, 「17세기 전반 북인 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8, 1992.

89)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59 전화조(錢貨條).

조하자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는 동전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전의 정책을 발전시켜 자신의 성과물이기도 한 대동법(大同法)의 세금 일부를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여 대동법과 행전법을 결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효종 4년(1653)에는 평안도에 행전 별장을 파견하여 행전을 독려하였는데, 강압적 추진과 모리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효종 6년(1655) 연말에는 은화 1냥 = 동전 6냥 = 쌀 1섬으로 동전의 가치를 은화에다 연계하였다. 효종 7년(1656) 국왕은 “김육의 고집스럽고 막힌 병통은 죽은 뒤에야 그만둘 터이므로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전책을 중단시켰다.⁹⁰⁾ 정부는 농민들에게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전 유통을 강제하였지만 농민들은 동전을 구할 수 없었다. 이에 상인들이 세금 대납을 하게 되어 그 폐단도 요란하였다.

조선 정부가 동전을 주조하려 한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① 17세기 중엽 이후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화폐 수요의 증대를 은화-추포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더구나 은화는 일본에서 유입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아 상평통보 발행 직전에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인식되었다.⁹¹⁾ ② 조선 정부가 고액 거래에 편리한 은화보다 서민의 소액 거래에 편리한 동전을 선호하였다. 이는 제민(齊民) 지배의 이념과 위민(爲民)의 유교 이념을 반영한 인식이었다. ③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이 숙종 34년(1708)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되어 공인층이 대두하고 상품교환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늘어났다. ④ 전란 이후 국가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재조의 방략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전란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자원으로

90) 『효종실록』 7년 9월 경오, 10월 경축

91)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농업 생산력 발전 및 상품·교환경제의 발달과 같은 국내 상황이 한 측면을 이룬다. (원유한, 「조선시대 화폐사 시기 구분론」, 『역사와 실학』32, 2007.) 다른 한 측면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성립에 따른 중계무역과 은 유입이 국내의 상업경제를 자극하였다는 대외적 상황이다. (한상권, 앞의 논문, 1983 ; 이영훈, 『한국경제사』, 일조각, 2017.)

유통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흡수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소금 전매, 공물작미(貢物作米)와 함께 동전의 주조·유통 논의가 그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⁹²⁾ 수취체제 정비와 함께 단시일 내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전의 주조·유통이 필요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⑤ 사상적 측면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청나라 고증학과 함께 서양 과학문명의 영향으로 실학자들이 동전 주조 등을 건의하였다.⁹³⁾ 이미 반계 유형원은 “1승포와 같은 추포가 유통되고 있으니 동전이 발행한다면 유통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바 있었다.⁹⁴⁾ ⑥ 국제적 시

92) 이미 16세기 후반 이후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운영에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는 본업인 농업의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말업인 상공업을 발전시켜 농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업보용론(末業補用論), 무본보말론(務本補末論)이었던 것이다. 이 주장은 양난을 겪으면서 국가재조를 위한 방략으로서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관료 및 유학자들에게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국가재조의 방략의 주체 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상업정책론이 근기 남인의 이권재상론과 서인-노론 계열의 재부민산론(財富民散論)으로 대립된다.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사연구』, 해안, 2000 참조.)

조선후기 조선 국가의 상업인식과 정책은 이말보본(以末補本)의 단계로 펼쳐졌다. 이는 농업을 산업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말업인 상공업을 이용하여 국가경제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보용(補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실 경제의 상공업 발달을 수용함으로써 국부 축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새로운 경제 기반으로 육성하자는 방향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미 16세기 후반 사림 계열 관인 및 유자들에게서 출현한 것으로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咸, 1517~1578)은 중의경리(重義輕利)의 본말 관념에서 더 나아가 본말을 상제(相制)하는 대등한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말업을 통한 본업의 보충인 이말보본론(以末補本論)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당시 조정에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선조 말기 ~ 광해군대에 가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이말보본론(以末補本論)은 상공업을 조선 국가의 유지 및 재조를 위한 경제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였다. (박평식,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 연구』, 지식산업사, 2018.)

93) 원유한, 앞의 논문, 2007.

94) 『반계수록』(磻溪隨錄) 권8, 전제후록고설(田制後錄攷說) 下. “지금 추포가 겨우 1~2승으로 포를 이루지 못하고 백방으로 그 쓰임이 없음에도 교역에 사용되므로 그를 금지하여도 그칠 수 없다. 만약 행전을 한다면 금지하고자 하여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今麤布僅一二升 元不成布百無所用 而貿遷相通 故禁之而不止 錢若一行 則雖欲禁止 亦不可得矣.”

조선후기의 화폐 문제를 사상적 측면에서 실학의 문제와 연관시킨 연구도 있었다. 이미 1940년대에 반계 유형원의 화폐론에 주목하여, ① 미(米)-전(錢)으로 세금을 거두자는 주장 ② 왕실의 지출 및 군사들의 녹봉, 여러 지출하는 비용을 미(米)-전(錢)으로 하자는 주장 ③ 역참을 통해서 행전을 시도하자는 주장 등을 제시한 바도 있었다. (유자후, 『조선화폐고』, 학예사, 1940.) 한편, 17세기 화폐 유통과 관련하여 김육, 유형원 및 김신국, 허적의 화폐경제론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원유한, 「잠곡 김육의 화폐경제사상」, 『홍대논총』11, 1980 ; 「반계 유형원의 상업 진흥론」, 『홍대논총』15, 1989 ; 「관료학자 김신국의 화폐경제론」, 『용암 차문섭 교수 화갑 기념 조선시대사 연구』, 신서원, 1989 ; 「17세기 고급관료 허적의 화폐경제론 - 실학자의 화폐경제론과 비교 검토」, 『동국사학』32, 1998.) 이에 더하여, 실학자들의 화폐 주장과 관련하여 화폐제도의 측면에서도 근대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던 연구도 있었다. (원유한, 앞의 논문,

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조선에서도 행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⁹⁵⁾

다양한 배경과 이유에서 숙종조 이전에 행전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화폐 발행과 같은 중요한 이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권재상론에 입각하여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사주(私鑄)와 같은 민간의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미 고려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이권재상론은 조선후기에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효종조에는 행전을 추진하면서 중국/일본 동전 수입과 사주(私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이 특징이다.⁹⁶⁾

행전을 실현할 정도의 시장 기반은 김육 당대에 조성되어 있었지만 행전에 대한 민간의 누적된 불만과 엘리트층의 비협조 및 행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행전은 좌절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육의 행전책은 주전의 중단이었을 뿐, 동전의 민간 유통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동전이 유통되었다. 17세기 전반에 행전이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향후 행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었다. ① 임진왜란 이후 은화의 활발한 유통으로 화폐 경제가 일정하게 성숙되었으며 이는 다른 금속화폐를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② 김육이 행전책을 추진할 때에는 동전량 부족이 원인이었는데, 이후 일본 동(銅)이 수입되면 행전을 지원할 수 있었다. ③ 행전이 가능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의 성장이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대동법 등으로 시장의 성장이 촉진되었으며 이미 성종조에 ‘장문’ (場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던 농촌 정기시인 장시(場市)가 전국적으로 들어섰다.

2007.)

95)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34-35쪽.

96) 임진왜란 당시부터 반정으로 집권하여 민심 획득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인조 때까지 주전론과 행전책이 논의되었다. (조선후기에 최초로 동전이 주조되었던 것은 인조 때의 일이다.) 그러나 동전은 제작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 확충이라는 주전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공작미(公作米)를 대신하여 받는 구리와 함께 동전 완제품도 수입하였다. 일본은 이미 VOC(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남아시아와 유럽에 동전을 수출하던 상황이었다. (유현재, 「임란 이후 주전론과 왜전 수입」, 『동국사학』56, 2014.)

2.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유통과 보급

1) 상평통보 유통의 배경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직전에 영의정 허적(許積)은 “은의 공급로는 협소한데 그 용처는 넓어서 … 물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人情)이 모두 행전을 원한다고” 하였다.⁹⁷⁾ 뿐만 아니라 반계 유형원은 “1승포와 같은 추포가 유통되고 있으니 동전이 발행한다면 유통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동전이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국가가 이를 금지하고자 해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 이라고 하였다.⁹⁸⁾ 이처럼 금속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성숙의 여건 아래 숙종 4년(1678)부터 이전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좀 더 세심한 행전책을 추진한 결과, 동전이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동전의 가치를 미곡-무명-은화에 결부하여 안정시키려 하였으며 세금의 일부를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봉급의 일부를 동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방관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주전을 하도록 하여 동전의 공급량을 늘리게 하였고 지방에 유통시키되, 김육 당대와는 달리 통용을 강제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금속화폐인 상평통보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서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의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다. 시장의 성장 및 은화의 유통 및 17세기 이래의 행전책에 따른 일정 규모의 동전 유통에 따른 금속화폐 유통의 경험에 힘입었다. 화폐 정책에 대한 민간의 누적된 불신을 극복하면서도 세심한 행전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⁹⁹⁾ 국제적인 시야에서는, 중계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은이 국내의 상업경제를 자극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교환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것 또한 상평

97)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1월 24일.

98) 15번 각주 참조.

99) 숙종조에 행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조조 이래의 동전 사용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아울러 전가(錢價)의 개정, 전문대봉(錢文代捧)과 같이 행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통해서 가치를 안정시키고 민간의 누적된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추후에 전가(錢價)를 은에 연동시키는 정책은 상평통보 유통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폐지되었다. 아울러 숙종조 행전을 통해서 화폐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주전의 중단으로 인해서 전황(錢荒)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았다.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통보의 유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자 그 이전 17세기 행전책의 실패와는 다른 배경을 이룬다. 이는 풍족해진 은으로 일본 등을 수입함으로써 상평통보의 원료를 확보했음에도 주목하는 바이다.¹⁰⁰⁾

2) 상평통보 유통의 목적

조선 정부가 17세기의 행전책 실패에 이어서 상평통보를 발행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첫째, 미포(米布) 등 물품화폐와 칭량은화(稱量銀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진왜란 이후로 사회경제적 발전, 시장의 발전을 반영하려는 추세에 따라 명목화폐인 동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¹⁰¹⁾ 둘째, 국가경제 재건을 위하여 국가재조론(國家再造論)의 한 방편이자 화권(貨權)의 장악을 통한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해 동전을 유통하게 되었다.¹⁰²⁾

두 가지 목적은 17세기 행전책의 목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17세기 행전과 달리 상평통보는 실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조달의 방편으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정부는 금속화폐 발행에 따른 실질-명목 가치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부가 주전

100) 송찬식, 위의 책 ; 이영훈, 앞의 책, 2017.

조선 정부가 구리를 수입한 것은 대마도였는데, 쌀과 면포를 자급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에 면포와 쌀과 같은 현물을 공급하고 대마도 상인들로부터 일본산 구리를 수입했다. 동래(東萊)를 통해서 대마도에서 수입된 구리가 주전 재료로 활용되었고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규모인 年 50-60만 냥 정도를 주조할 수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유통이 가능했다. (유현재, 「조선 후기 주전 정책과 재정 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101) 원유한, 앞의 논문, 2007.

102) 이미 인조 3년(1625) 호조판서 김신국(金愼國)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전폐(錢幣)는 쥐고 있어도 따뜻한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배부름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선왕(先王)이 이것 한 가지로 인사(人事)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곡물은 백성이 먹는 것이니 관(官)에 쌓아두면 백성들이 굶게 됩니다. 면포는 백성들이 몸을 가리는 것이 위에서 취하면 아래가 춥게 됩니다. 전(錢)은 사용처가 없는 물건이지만 인주(人主)의 권병(權柄)이 되는 것이니 천하에 유행하도록 하여 불의불식(不衣不食)의 화폐로 삼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홀로 의식(衣食)의 자료를 통행하는 화폐로 삼으니 가난하고 군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동전을 제작하여 한 나라의 통행하는 화폐로 삼으면 백성의 재물이 쌓이고 후세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 김신국, 『후추선생집』(後瘳先生集) 인사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곧 화권(貨權)의 장악을 말하며 인민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자원을 마련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언급된 포(布) 가운데 당시에 널리 유통되던 추포(麤布)는 농민의 직접 생산물이기 때문에 화권(貨權)이 이들의 손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승철, 앞의 책, 2000 참조.)

이익(시노리지)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주전 이익을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은 동전의 가격이었다. 이러한 주전 이익에 대해서는 재료공학의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가 주목된다. 은 1냥에 대비한 동전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동전 1문의 중량을 계속해서 낮아졌다.¹⁰³⁾ 처음 상평통보가 주조되었을 때에 하나의 무게는 2돈쫑 = 7.5g이었다. 『속대전』(續大典) 국폐조(國弊條)에는 2전 5분으로 9.4g이었다. 이후 동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조 18년(1742) 7.5g에 이어 영조 28년(1752) 6.4g, 영조 33년(1757) 4.5g으로 줄어들었다. 182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동전의 양이 늘어나고 갑산동광의 채굴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전 이익률이 크게 높아졌다.¹⁰⁴⁾ 다른 한편으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구전(舊錢)을 용해하여 더 가볍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신전(新錢)을 제작하는 방식이 시도되거나 애초에 상평통보의 무게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시노리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나 상평통보와 같은 금속화폐는 그 제조 과정이 다른 금속 수공업과의 관련성을 지적할 수 없는데, 군문(軍門)에서는 무기 제작을 위한 노(爐)를 구비하고 있었고 숙련공을 확보하기 쉬웠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도 주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⁰⁵⁾

3) 화폐 유통의 실태

화폐 유통에 있어서는 정부의 유통 정책만큼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화폐 사용 실태 및 화폐 가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17세기 후반 이래 전국적으로 유통된 상평통보의 사용 실태 및 당대인의 화폐 가치

103) 동전의 무게뿐만 아니라 구리 성분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주전소와 주전 시기가 다른 상평통보 25점을 대상으로 한 재료학적 특성 연구에서, 구리-아연-납이 주성분인 상평통보의 여러 시료를 분석한 결과, 주전 시기에 따라 구리 성분의 함량이 갈수록 감소하였음이 확인 가능하다. 이는 당시 주전 이익과 관련된 성분 함량의 차이로 보인다. (장수비 외, 「조선시대 상평통보의 성분 조성 및 미세조직을 통한 재료학적 특성 연구」, 『보존과학저널』31, 2015.)

104) 상평통보 발행 당시의 조선이 청과 달리 가격을 높게 잡았고 차액은 정부의 주전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은전비가(銀錢比價)의 측면에서 일본 오사카와 중국 북경은 은 1냥 당 800~1000문(文)이었는데, 조선은 낮게는 200문으로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 정부가 주전 이익으로 가져가는 액수는 은 1냥 당 600~800문에 달하였다. (유현재, 앞의 논문, 2014.) 다만 은전비가의 국가간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다.

105) 유현재, 위의 논문, 2014.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우선, 조선 정부는 세금 수취에 있어서 논보다 밭이 많은 산간 내륙에서 결세의 일부를 쌀이 아니라 동전으로 수취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동전으로 수취하는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심지어 흉년이 들면 지방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동전을 발행하여 시장 거래에 의한 미곡 이동을 촉진하였다.¹⁰⁶⁾ 즉 풍흉에 따른 생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¹⁰⁷⁾ 더하여, 한성부민(漢城府民)들의 생활자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환(換)¹⁰⁸⁾을 비롯한 금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동전을 한성으로 현송(現送)한 것은 동전의 현송이 현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단이 됨과 동시에, 왕도(王都)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비할 재화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 상납되는 동전의 양은 132만 냥으로 1분을 4.5g으로 보았을 때에 총 596톤에 달하며 전국 평균 8일간에 연인원 74,000명을 동원하여 운반하는 막대한 양이었음에도 현송을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송에 따른 운송비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재정 운용 체제를 유지했던 조선왕조 재정의 특징이기도 하였다.¹⁰⁹⁾ 이 점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굳이 미포(米布)의 현물 수취를 끝까지 유지하였던 것 과도 관련이 있다. 현물 재정은 한성부민들의 생활 자료 및 양반 관료군과 중

106) 이영훈, 앞의 책, 일조각, 2017.

107) 이영훈·박이택,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2007.

108)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금전 거래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미리 서로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된 범위 안에서 발행하는 신용 거래 형태가 바로 환이다. 예컨대, 의주 상인이 서울 상인 甲에게 받을 돈 1만 냥이 있고 서울 상인 乙에게 지불할 돈이 1만 냥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의주 상인은 乙에게 甲을 지급 의무자로 정하는 1만 냥의 환을 발행하여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부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송(現送)에 드는 운송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적 등에 의한 강탈의 위험성도 있기에 이런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나 조선후기 금속화폐인 상평통보는 한 마리(태-駄)에 200냥(동전 2만 개) 이상을 실을 수 없었다. 따라서 1만 냥의 현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났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송방(松房)이라는 지방 영업점을 갖춘 개성 상인들에 의해서 환이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18세기 환 거래는 서울, 전주, 강경, 강릉 등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19세기에는 해주, 연안, 서흥, 함안, 인천 등 소규모 읍으로 확대되었다. 환은 일반 상거래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불, 여행의 경비 지출, 국제교역의 수단, 매관매직의 지불 수단, 조세 상납 및 재정 운용에서도 활용되었다. 환과 같은 신용 화폐의 유통에 따라 외국 돈과의 교환을 위한 환전객주가 출현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마르크, 엔화에 대한 교환 시세도 형성되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한말 신용거래의 발달 - 於音과 환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3(2), 2010.)

109)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동전 - 『부역실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44, 2008.

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현물과 동전의 납부를 적절히 배분하여 일정한 양의 현물을 세액으로 고정해두었다.

동전의 보급은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물가 관념의 발달을 가져왔다. 18-19세기 양반가의 일기에는 물가 변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17세기 말부터 유통된 동전의 성질은 모든 재화의 일반적 등가물로서 후대의 화폐와 같지는 않았다. 17-18세기의 동전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여러 재화 중의 하나였다. 당시인들은 무엇을 팔아 동전을 취득하는 행위를 “무전(貿錢)”, 즉 “돈을 산다고” 하였다. 동전은 먼 길을 가기 위한 여비나 남에게 주기 위한 선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 등 특별한 지불 수단으로서 구입되었던 것이다.¹¹⁰⁾

4) 폐전론의 대두와 전황(錢荒)

숙종 초기 화폐의 유통은 “민개락용(民皆樂用)” 이라고 할 만큼, 지역별로 유통 확대의 시차는 있었기는 하였어도 크게 성공적이었다.¹¹¹⁾ 그러나 그로 인한 사회문제 및 금속화폐 유통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화폐가 유통되면서 상인들은 신포(身布)·대동(大同) 등의 대전납(代錢納)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었으며 전문방납(錢文防納)으로 농민들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부세체계 이외에도 농업 생산물과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어 농촌 사회의 변동을 촉진하였다.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지역적·계절적인 물가 차이는 고리대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퇴장(退藏)을 통한 화폐의 자기 증식도 사회 문제가 되었다.¹¹²⁾

110) 선혜청(宣惠廳)이 아뢰기를, “본청에서 봄 가을 두 차례에 8두씩 받아들이는 곡식에 대해서 10분의 1을 돈으로 바치게 하면 경기 지방의 백성들이 뉘나루, 솟, 짐승, 물고기 등을 팔아 관에 바치고 농사지은 곡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한 해를 보내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니, 그 혜택이 클 것입니다. …” 宣惠廳 啓曰 本廳 春秋 兩等 各八斗內 許以錢文代納 十分之一 則畿甸之民 可以柴炭禽魚 貿錢 納官 而耕農所出 留作終歲之資 惠莫大焉. (『인조실록』 인조 12년 2월 23일 庚辰)

111) 『승정원일기』 265책, 숙종 4년 6월 3일.

112) 송찬식, 앞의 책, 1997.

이러한 가운데, 화폐 통용을 촉진한 부국이민론(富國利民論)에 제동을 걸면서 안민론(安民論)에 입각한 폐전론이 제기되었다. 이미 효종조에 행전을 주장한 김육에 대해서 안민(安民)을 내세운 산림 세력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나 동전이 보급되면 이익 추구 관념이 성장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고리대¹¹³⁾, 뇌물, 도적이 횡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안민론자들의 폐전론으로 나타났다. 숙종 11년(1685) 남구만(南九萬)은 “대개 동전이 통용한 이래부터 백 가지 폐단이 일어나 각지에서 도적이 발호하여 관청에서도 뇌물이 행해지며 이익의 구멍이 다양하여 인심이 더욱 간교해지니 논자들이 모두 동전 통용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¹¹⁴⁾ 숙종 24년(1698)부터는 이러한 폐전론이 활발히 제기되었고 이익(李瀾)은 동전 통용이 사치-탐욕을 조장하며 농업에 해롭고 도적을 발호시켜 백성을 곤궁하게 했다며 폐전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① 은화론(銀貨論)에서는 금은(金銀)과 속(粟)을 비교하면서 사치에 대한 경계를 역설하였으며 ② 전해론(錢害論)에서는 무농(務農)-절검(節儉)-금탈(禁奪)을 통해서 인민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錢)이라고 하는 것은 취렴하는 자, 축말하는 자, 도적놈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서(衆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¹¹⁵⁾ 여기에 더하여 숙종-경종의 뒤를 이은 영조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동전의 폐지를 의도하여 영조 3년(1727) 곧 철회하기는 하였어도 공적 용도에 은화(錢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숙종 21년(1695)으로부터 영조 초기까지는 이상과 같은 폐전론과 주전론의 격렬한 대립, 그리고 영조 개인의 소신에 따라 오랫동안 주전이 정지되었다. 화폐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시중에 동전이 부족해진 전황(錢荒)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시기에 흉년이 지속될 때마다 현실 정책의 측면에서 주전이 요청되었음에도 폐전론자들의 원칙론적

113) 본래 농촌에서는 5할의 이자율에 따른 장리(長利)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동전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국가 차이로 인하여 이자율이 더욱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폐전론자들은 이를 동전으로 인한 농민 몰락의 촉진 현상으로 보고 비판하였다.

114) 『비변사등록』 49책 숙종 21년 11월 21일.

115) 유자후, 앞의 책, 1940, 216-224쪽.

공격이 우려되어 감히 주전을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¹¹⁶⁾

물론 전황의 원인이 단순히 폐전론과 영조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황의 원인은 앞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였다.¹¹⁷⁾ 첫째, 이전부터 있었던 광산 억제 정책에 따라 원료난이 발생하였고 상인들의 해외무역 독점으로 원료난이 가중되었다.¹¹⁸⁾ 원료난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의 수입처였던 일본의 동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동전의 원료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 동전을 수요만큼 생산하지 못하기도 하였다.¹¹⁹⁾ 둘째, 화폐 도입과 더불어 시장이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화폐 수요의 증가는 전황을 심화시켰다. 셋째, 17세기 후반 이후 그 이전까지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던 은의 입지가 통화시장에서 위축되었기에 전황을 심화시켰다. 넷째, 중앙-지방의 관청-군영에 세수로 들어온 동전이 퇴장됨에 따라 전황이 심각해졌다. 특히나 이러한 퇴장(退藏)의 방식은 지주-상인들이 토지 생산물을 동전을 받고 판매한 뒤에 그것을 퇴장시켜서 고리대 자본으로 활용하는 주된 형태이기도 하여 폐전론자들이 주전을 안민의 차원에서 비판하는 주된 논거가 되었다.¹²⁰⁾

요컨대, 전황(錢荒)은 동전 발행의 억제와 동전 원료난, 동전의 퇴장에 더하여,¹²¹⁾ 교환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상(私商)·아문(衙門)·군문(軍門)에 동전이 집중되거나 이들의 고리대 활동을 위한 화폐의 퇴장으로 발생하였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전황이 한 가지 현상이 아니라 ① 화폐경제의 확대에 따른 지주·상인·조세청부업자의 화폐 축장(蓄藏, 18세기 전반)으로 인한 영조조의 전황과 ② 사상(私商)의 화폐 주도권 장악에 따른 공시전황(貢市錢荒)으로 구분할 때에 더욱 의미가 크다.¹²²⁾ 영조조의 전황과 정

116) 송찬식, 앞의 책, 1997.

117) 이정수·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제5장 조선후기 화폐량과 전황)

118) 원유한, 「18세기에 있어서의 화폐정책」, 『사학연구』19, 1967.

119) 유현재, 앞의 논문, 2014.

120) 유현재, 위의 논문.

121)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 한국 연구원, 1975.

122)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 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1984 ; 「19세기 전반 조세

조조의 공시전황을 구분할 경우, 18세기 사상의 성장에 따라 총 통화량의 증가를 통한 전황 구폐책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지적 가능하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전황의 원인으로 전(錢)의 불균등 편재(偏在)로 인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¹²³⁾

안민을 내세운 폐전론의 맹위에도 불구하고, 영조 7년(1731)에는 심한 흉년으로 인해 동전을 주조하여 재원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전황으로 인한 전(錢)의 불균등 편재(偏在)에 따른 민폐(民弊)가 극심하여 폐전론이 갖는 설득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1660년대까지 행전이 실패했던 상황과는 정반대로 국가가 금속화폐 유통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로서도 동전보다 편리한 징세·거래 수단을 구할 수 없었기에 영조 7년(1731) 다시 동전을 주조하게 되었다.

1800년경 동전량은 900만 냥 내외로 미곡 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180만 석을 구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 1820년대까지 전황 국면이 점차 완화되었는데, 이는 인구와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도 신전(新錢)이 꾸준히 공급되었던 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화폐의 주전 원료인 동(갑산동광)과 은의 광산 개발 등이 본격화되면서 화폐 원료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19세기에 와서 전황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860년경의 동전량은 1400만 냥 내외로 미곡 생산의 13%에 해당하는 200만 석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였다.

5) 고액전 발행론과 당백전

폐전론이 후퇴하고 영조 7년(1731)부터 동전 주조가 재개된 이후로 고액전 발행이 전황과 동전 원료 부족의 대책이자 원격지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하였다. 1730-181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된 고액전 발행론은 당십전 발행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① 인플레이에

수탈 구조의 특질과 기반], 『국사관논총』17, 1990. (이재운, 「18세기 화폐경제의 발전과 전황」, 『학림』18, 1997 참조.)

123) 이재운, 「18세기 화폐경제의 발전과 전황」, 『학림』18, 1997.

대한 우려, ② 뇌물과 도적의 성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고액전이 발행되지는 않았으며 ③ 19세기 갑산 동광의 개발에 따른 동 생산 증가에 의해 동전이 대량으로 주조되면서 고액전 주조 유통 논의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대규모 거래와 고액 거래에서는 신용 거래 수단으로 환(換)이 이용되어 무거운 동전의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였다.

논의에만 그쳤던 고액전 발행이 현실화된 것은 고종 3년(1866) 10월 우의정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를 고종이 재가하여 당백전(當百錢)이 발행되면서부터다. 경복궁 재건 사업과 군비 증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발행된 당백전의 실질 가치는 기존 동전의 5-6배에 불과했으나 액면 가치는 100배에 달하였다.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일단 당오전·당십전을 먼저 유통시키고 더 고액인 동전을 발행하자고 하였으나 고종 7년(1867) 1월부터 당백전이 대대적으로 유통되어 같은 해 6월까지 1600만 냥이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주(私鑄)를 감안하면 유통 자금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백전 발행으로 물가가 5-6배 폭등하였고 일문전을 구축(驅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종 8년(1868) 2월부터 대원군이 개입하여 당백전 유통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년 10월에 당백전 통용이 중단되었다.

본래 조선조에서 빈민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고, 저화와 같이 소재-명목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화폐를 국가적 통제력 확보를 위해 화권재상론(利權在上論)에 따라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역사(大役事)를 위해서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고려-조선시기에 걸쳐 처음이었다. 그런 점에서 주전 이익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한 일은 왕도(王道)에 입각한 안민책과는 거리가 멀었고 경복궁 공사비 마련 및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했다. 개항 이후에도 당오전과 같이 주전 이익을 목표로 한 화폐 공급책들이 추진되었는데, 이 또한 부국강병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전 이익 확보 정책은 문호 개방 이후의 역사에 심각한 부작용을 남겨서 재정난의 심화, 정부의 행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신 야기, 물가 폭등과 같은 민간의 경제난으로 이어졌다.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5>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조선후기)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제3장 이조시대(李朝時代)의 화폐</p> <p>제3절 인조~효종조 동전의 발행 보류, 팔분서(八分書) 조선통보 발행, 수입 중국전의 통용</p> <p>제4절 숙종조 상평통보의 발행, 초주(初鑄) 단자전, 절이대형전(折二大型錢)의 발행, 발행 현황, 은의 사용, 절이전의 주조 관아</p> <p>제5절 경종~영조조 동전 유통의 침체, 동전 제조, 당십(當十) 대전(大錢) 논의, 동전 제조의 재개, 은화 사용 논의, 당십(當十) 대전(大錢) 시주(試鑄), 중형전(中型錢)의 출현, 상평통보(常平通寶) 배자(背子)의 변천</p> <p>제6절 정조~철종조 개황, 중형전 제조, 청전(淸錢) 수입, 십전통보(十錢通寶)의 발행, 소형전의 출현, 순조조, 선혜청 전(錢)의 배자 변천, 현종조의 동향, 철종조</p> <p>제7절 서양 주화의 유입, 당백전 발행, 청전 통용, 조선통보(朝鮮通寶) 배호일전(背戶一錢), 대동전(大同錢) 발행, 당오전(當五錢) 발행, 신전(新錢)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대별 서술 • 주로 연대기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 서술 • 제3절이 인조~효종조로 시작하여,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화폐 문제에 대한 서술이 없음. • 제5절에서 화폐 주조 중단을 논하였지만 전황의 인과에 대한 서술이 없음. 폐전론 및 전황이라는 용어가 없음.

	주요 내용
『증보 한국화폐사』 (1969)	<p>제3장 이조시대</p> <p>제3절 선조~효종조 선조대의 주전 논의, 주전의 발행 보류, 팔분서 조선통보 발행, 수입 중국전의 통용, 사주전의 허락</p> <p>제4절 숙종~경종조 상평통보의 발행 동기, 초주 단자전, 절이 대형전(당이전) 발행, 동전의 주조 발행 상황, 은화의 사용, 절이전 주조 관아 및 화중, 경종대의 주전 시도</p> <p>제5절 영조~정조조 영조의 동전 혁파 시도, 동전 가주(加鑄)의 필요성, 당십전 주조 논의, 동전 주조의 재개, 은화 통용 논의, 당십전 시주, 주전청 설치, 중형전의 출현, 상평통보 배자(背子)의 변천, 호조의 주전 전관, 연례주전제의 실시, 청전 수입 시도, 각종 대전 주용 논의</p> <p>제6절 순조~철종조 주전 관리 질서의 문란, 동전의 주조 상황, 헌종대의 주전 상황, 철종조의 주전 상황, 은화 통용 논의</p> <p>제7절 고종조 당백전 발행, 청전 통용, 조선통보(朝鮮通寶), 대동전 발행, 당오전 발행, 신전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대별 서술 • 제3절에서 선조대의 화폐 문제 논의 제시 : 명군(明軍) 경리(經理) 양호(楊鎬)의 주전 주장. 명군을 통한 은화 지출과 은화 보급을 논하였음. • 제3절에서 지속적인 은화 유통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동아시아 무역 체제 속의 은 유통 문제는 언급되지 않음. • 제5절에서 전황이라는 용어 및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서술이 없음. 폐전론에 대한 언급 없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절에서 세도정치 시기의 화폐 문제를 봉건적 지배체제의 동요로 설명.
『한국의 화폐』 (1982)	<p>제3장 조선시대</p> <p>제2절 조선후기의 동전 발행과 통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통보의 재발행과 화폐 유통 장려책 2. 상평통보의 발행 3. 상평통보의 유통과 조선후기의 화폐제도 영조대의 주전 제도 및 동전 발행, 정조대의 주전 관리 및 청전 수입 시도, 순조~철종 연간의 주전 현황 4. 대원군 집정기의 화폐 발행과 유통 당백전의 발행과 화폐제도의 문란, 청전의 수입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대별 서술 → 시대별 서술. · 이전에 비해 전근대 내용 대폭 축소. · 조선전기는 세조조의 전폐(箭幣)까지만 서술하고 조선후기는 인조조부터 서술하여 선조조의 화폐 문제는 언급이 없음. · 제2절에서 선조조의 화폐 문제 및 은 유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짐. 은화 유통 논의까지도 모두 빠짐. · 제2절에서 상평통보 발행에 있어서의 은전비가(銀錢比價) 개념을 제기하였음. · 동전 부족 현상을 소위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전황 개념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음. 영조조의 동전 부족은 발행 중단으로, 정조조의 동전 부족은 일본 동전의 수입 부진으로 설명하였음. · ‘폐전론’ 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동전 혁파 시도에 대한 사상적 영향을 제시함.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동 증감 문제 제시 · 당백전 발행 동기로 중전에 소개된 경복궁 중건 비용에 더

	주요 내용
	<p>하여 군비 증강, 국가재정 보완, 민생 구제를 제시함. 발행의 결과로서는 악화의 발행으로 인하여 이조말기(李朝末期) 화폐제도의 문란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함.</p>
『한국의 화폐』 (1994)	<p>제3장 조선시대 제2절 조선후기의 화폐 유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경제적 배경 2. 은화의 유통 3. 동전의 주조 및 유통 정책 동전의 주조, 동전의 유통 정책 4. 동전 유통의 확대 및 그 영향 동전 유통의 확대, 동전 유통의 영향 5. 화폐 제도의 혼란기 당백전의 발행과 화폐제도의 문란, 청전의 수입 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 주제별 서술. · 오히려 상평통보 발행 이후에 대한 주제별 서술에 초점을 맞춤. · 전근대 내용의 소략함은 유지됨. · 선조조의 화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함. · 동전 발행의 동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함. · ‘동전의 주조’ 와 ‘동전의 유통 정책’ , ‘동전 유통의 확대 및 그 영향’ 을 별도의 절로 구분함. · ‘폐전론’ 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동전 혁파 시도에 대한 사상적 영향을 제시함. · 화폐 유통 반동기라는 시기 설정은 있었으나 전황이라는 용어 및 그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동전 유통 가치 인식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나 당대 동전 사용자들의 사용 실태에 대한 서술은 없음.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화폐』(2015)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그 이전 서술체계(왕대별 서술, 시대별 서술, 주제별 서술)에서 벗어나 화폐 유형별 서술의 경향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유통이 강제됨에 따라 구 화폐와 신 화폐가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현대의 화폐사 서술에는 부합될지 모르나 미포(米布)와 여러 종류의 동전, 은화 등이 다양하게 유통되면서도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전근대 사회의 화폐사 서술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별-주제별 서술의 장단점을 취하여 화폐 유형별 서술이 전근대 화폐사 서술에 갖는 난점을 극복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은화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전 서술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 화폐 문제의 변화상을 제시하였다. 관련된 연구 및 『우리나라의 화폐』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에 은화를 비롯한 금속화폐의 유통을 논함에 임진왜란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정작 임진왜란 자체가 그러한 국제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대항해시대를 비롯한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군사적·경제적 문제와의 연관성은 양난 이후 5군영의 성립과 군문(軍門)의 화폐 발행과도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기에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 조선 전기 서술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16세기 이래 국내 교환경제의 발달이 은화의 유통에 기반이 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런 경험들이 금속화폐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지적할 필요도 있겠다. 결국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으로서의 양난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서술할 필요가 있겠다.

상평통보 이전 17세기 동전 유통 정책에 대해서는 선조조 이래의 행정책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화폐 유형별 서술의 한계로 인하여 그 계통과 체계를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은화의 경우에는 그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후 상평통보 발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형별 서술의 난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관련된 연구 및

『우리나라의 화폐』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에 이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상황과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의 차이로 가능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생각된다. ① 정묘-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의 영향 ② 일본 동의 수입 가능 여부 (은을 매개로 한 중계무역의 영향), ③ 정치세력의 문제 (행전책에 대한 산림세력의 견제, 숙종 즉위년(1674)으로부터 경신환국(1680) 사이의 숙종 4년(1678) 상평통보 발행 시작, 서인-남인 양대 세력의 국가 재조 방략의 차이) 등이다. 아울러 조선통보, 십전통보 등 실물이 남아 있는 화폐들이나 당대의 사료를 통해서 후대 상평통보와 주전 이익률 및 재료 성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상평통보 발행 이전의 행전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평통보의 실물에 대해서는 이전의 서술보다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어 더욱 풍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관련된 연구 및 『우리나라의 화폐』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에 『우리나라의 화폐』에서 상평(常平)이 상시평준(常時平準)의 줄임말이라는 것, 엽전(葉錢)이라고 불렀던 이유, 무배자전-단자전-당이전 등을 소개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¹²⁴⁾ 다만 여기에 더하여 역사학 이외의 연구 성과로서, 상평통보에 대한 재료공학적인 연구 성과도 반영하여 동 가격 상승과 시노리지 확대를 위한 상평통보의 질량 및 성분 변화까지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겠다. 아울러 단지 ‘상평통보를 제조할 때에 여러 개의 잎이 달린 나뭇가지 모양의 거꾸집에 주물을 부은 이후에 이것이 굳으면 앞사귀처럼 매달린 동전을 떼어낸 데서 엽전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는’ 것에 더하여 실제 수공업 생산 공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서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이것이 군기(軍器)나 유기(鑪器) 등과 같은 다른 금속 수공업들과의 연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평통보의 발행 목적에 대해서는, 이전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상평통보 그 자체의 발행 목적에 대한 서술은 없는 한편, 인조-효종조 이래의

124) 한국은행 편, 앞의 책, 2015, 32쪽.

행전책에 대해서 목적을 제시한 것으로 그쳤다. 관련된 연구 및 『우리나라의 화폐』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에도 ‘목적’이나 ‘이유’, ‘배경’ 및 발행의 ‘효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화폐』에서는 ‘동전을 법화로 유통·보급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던 이유’를 제시하였는데,¹²⁵⁾ 실상 그 내용은 이유라기보다는 배경에 해당되며 정작 조선 정부가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여 여전히 목적-이유-배경-효과의 개념상 혼란이 있는 듯하다.

화폐 유통의 실태에 대해서는, ‘동전 유통 확대의 영향’에 서술된 내용이 이전 발행된 『한국의 화폐』(1994)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생활일기류나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한 당대인의 화폐 사용 실태 및 화폐 가치 인식을 서술에 반영할 필요도 있겠다. 아울러 동전 주조 사업이 무기-유기 제조업 등 각종 금속 수공업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같은 금속 수공업으로 제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서술이 유기금단사목(鑰器禁斷事目)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¹²⁶⁾

125) 한국은행 편, 위의 책, 27쪽. 이 글에서는 ‘17세기 동전 통용 정책’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126) 한국은행 편, 위의 책, 41쪽. 〈수공업 발달〉

4. 전망과 제언

1. 화폐사 연구, 더 큰 범주에서는 경제사 연구에 있어서의 분분한 논의의 조정이 필요하다. 같은 시기 및 사료를 두고서도 국사학과와 경제사학계의 이견이 매우 큰 실정인데, 이러한 사정이 화폐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 만큼, 이 사이의 의견 조정 및 실증에 의한 가부(可否) 판별이 필요하다.

2. 세계적 은의 흐름이라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에 대한 연구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동전과 일본 동전의 수입 문제에 대한 연구와 서술이 필요하다. 이미 고려시기 즈음에 일본에서는 송전(宋錢)을 수입하였고 에리제니(撰錢)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효종조에 일본 동전이 수입되었고 고종조에는 청전이 수입되었다. 이것이 중-일의 화폐정책 및 경제동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애초에 일본이 송전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을 송대 지폐 유통과도 관련짓는 것처럼 조선의 청전-왜전 수입 또한 중-일의 경제적 동향과 연관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동아시아 삼국간의 은전비가(銀錢比價) 차이와 이것이 갖는 경제사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3.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치-군사적 분야와의 연관성 속에서 연구·서술할 필요가 있다. 금속화폐의 재료가 되는 여러 금속들은 군문(軍門)에서도 필요한 것이었으며 애초에 주조 자체가 군영에서 이루어졌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벌, 5군영의 성립과 같은 군사 문제와 함께 주전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행전책이 국가재조의 방략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를 보였던 정치세력(서인-남인)의 동향 및 이들 세력의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변통론-變通論)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정치사 및 사회경제사의 큰 관점 속에서 화폐사 연구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4. 19세기 화폐사에 있어서, 대원군 치세 및 개항 이후 근대적 부국강병 담론의 등장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고액전 발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화폐사를 봉건적 지배체제의 해체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조선후기의 고액전 발행 논의로부터 대원군의 당백전 발행, 개항 이후 필렌도르프 주도로 이루어진 당오전 발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상평통보의 질 및 성분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시-고-중세사 화폐사 연구와 달리,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는 많은 양의 실물 화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하는 재료공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구리(Cu), 주석(Sn), 아연(Zn)을 비롯한 여러 금속들이 동전 주조에 활용되었다. 이것은 상평통보에 표시된 주전소별로¹²⁷⁾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시기별로 어떤 주재료인 동의 성분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사 부분 서술에서 지질이나 화폐 도안 등에 관해 많은 서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이전 부분에서 소략하게 서술된 부분이다. 이것은 결국 동전 자체의 실물 가치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시노리지의 양, 주전 이익의 크기에 관한 문제에 직결되기도 할 것이다.

6. 동전을 주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금속 수공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화폐』 현대사 부분이 화폐 제작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의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7. 용어의 통일 및 오류의 시정이 필요하다. 실질-명목 가치, 소재 가

127) 상평통보 후면에 새겨진 약칭은 주조관청을 말한다. (營은 어영청, 禁은 금위영, 戶는 호조, 折는 경기감영, 京은 한성부, 宣은 선혜청 등)

치 등 같은 책에서도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 동전[淸錢]과 일본 동전[倭錢] 또한 용어가 분분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다른 저작에서는 금속화폐인 동전을 가리켜 고액권(高額券)-소액권(少額券)이라고 하는 등 용어 자체의 오류도 있다.¹²⁸⁾

1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Ⅵ. 결 어

고조선~삼국, 고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걸쳐서 해당 시기 화폐사 연구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화폐』의 서술을 검토하고 향후 화폐사 연구에 대한 전망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작업은 화폐사의 일단(一端)을 통하여 사회경제사, 나아가 한국사 연구에 대해서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조선~삼국 시기의 화폐사는 전하는 문헌 자료가 극히 적어 그 구체적인 면모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따르지만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하여 지역간 교류에서 화폐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흑요석(黑曜石)과 옥(玉), 다양한 실물화폐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였으며 고조선 성립 이후의 중계무역에서 중국화폐가 유입, 유통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화폐로 지적되는 명도전(明刀錢)이 활용되었음을 정리하였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물품 및 실물 화폐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유의하여 화폐의 유통 여건을 소개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앞으로 남북국 시기에 대한 화폐사 연구가 진전되어 고려 시기와의 계기적인 파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려 시기는 우리나라 화폐사상 최초로 금속화폐를 주조하고 그 유통을 시도한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곡, 포(布) 등 물품화폐와 쇠은(碎銀) 등 칭량화폐, 철전(鐵錢), 동전(銅錢), 은병(銀瓶) 등 국가가 발행한 금속화폐가 공존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고려 시기 화폐에 대해서는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이나 국가 정책 차원의 주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철전-동전의 유통 부진에 대해서는 교환 경제의 미숙성을 지적하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박론이 제시되었다. 다만 당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여러 화폐들이 유통되었던 사정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화폐제 개혁론과 관련하여, 유학의 경제관에 입각한 화폐론으로 ‘화권재상(貨權在上)’의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

이며 이를 통해 여말선초 화폐 정책을 계기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전기는 국가에 의해서 최초로 금속화폐가 주조된 고려 시기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보급된 조선후기 사이에 위치한 시기로 명목화폐의 유통을 시도한 시기다. 다만 명목화폐 유통이 실패했다는 점만을 강조한다면 조선전기의 경제상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위험도 있겠다. 조선전기 정부는 ‘화권재상’의 이념 속에서 집권적 통치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화폐 유통을 시도하였고 민간에서는 추포(麤布)가 유통되면서 상평통보(常平通寶) 유통 전까지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처럼 화폐경제의 단계 설정에 있어서, 추포를 반(半)물품화폐로 보느냐 혹은 준(準)명목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조선의 화폐경제 발전 단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는 우리나라 화폐사상 최초로 일반 민(民) 단위까지 금속화폐가 유통된 시기이며 16세기 이래의 국내 상업 발전과 동아시아 무역의 발달이 이러한 화폐 유통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은(銀)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 무역과 16세기 이래 국내 상업의 발전은 금속화폐 유통의 기반이 되었으며 양란 이후 국가재조(國家再造)의 방략으로서 행전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안민론에 기반을 둔 폐전론이 대두하기도 하였다. 동전 주조가 재개된 이후로는 고액전 발행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고액전 발행이 현실화된 것은 개항 직전의 당백전(當百錢)이었다. 개항 이후에는 부국강병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고액전이 발행되었다. 조선후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실물 화폐가 상당수 남아 있어서 실제 주전의 양상과 주전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개항 이후 근현대 화폐사와의 연결성 또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견해차도 크기에 이를 명료하게 분간·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에 군기(軍器)·유기(鑄器) 등 여러 금속류 수공업과 화폐 주조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중국·일본 동전의 수입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의 현황을 원시에서 고대, 고려와 조선왕조까지 이상과 같이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가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한국은행 발간의 『우리나라의 화폐』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지침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은의 유통 문제나 ‘화권재상’의 논리 등과 같은 여러 주제들을 우리나라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화폐사를 사회경제사, 나아가 한국사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15년 발간된 『우리나라의 화폐』의 화폐 종류별 서술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근현대 화폐사에 비해서 소략한 전근대 화폐사의 내용에 대해서 최신의 연구 성과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는 해방 이후의 어려운 제 여건 속에서도 부단히 그 성과를 축적하여 왔으나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사상 단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시각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화폐사를 통사 형태로 정리하는 이러한 작업이 국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담당해야 할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화폐』와 같은 대중서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화폐사 연구의 단계를 고려하여 학계 내에서 화폐사 연구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그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과를 전문 서적의 형태로 발간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이처럼 우리의 시각에서 정리한 우리나라 화폐사를 영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화폐 박물관의 전시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내국인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폐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전환할 기회로 삼는 방안 또한 한국은행이 담당할 고유의 과제라 하겠다.

VII. 참고문헌

1. 자료(집)

『고려사』 ; 『고려사절요』 ; 『고려도경』 ; 『조선왕조실록』 ; 『증보문헌비고』 ; 『비변사등록』

장동익, 『송대려사자료집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_____, 『원대려사자료집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 연구서

강만길, 『한국 상업의 역사』, 1974.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국사편찬위원회 편,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남수,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박용운, 『고려시기사』(수정증보판), 일지사, 2010.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_____, 『조선전기 교환경제와 상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9.

_____,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연구』, 지식산업사, 2018.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 해안, 2000.

송찬식, 『이조의 화폐』, 한국일보사, 1975.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오두환,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1991.
- 원유한, 『한국의 전통사회 - 화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2006.
- _____,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 한국연구원, 1975.
- 유자후, 『조선화폐고』, 이문사, 1974.
-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이병희,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이영훈, 『한국경제사』 I · II, 일조각, 2017.
- 이정수 · 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종봉,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 해안, 2001.
- 이종영, 『조선전기사회경제사연구』, 해안, 2003.
- 이헌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_____, 『한국경제통사』, 해남, 2014.
-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 전용덕,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 사회 - 조선 사회경제사의 새로운 이해』, 태학사, 2017.
- 최몽룡, 『한국고대국가형성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한국은행, 『한국화폐사』, 1966.
- _____, 『증보 한국화폐사』, 1969.
- _____, 『한국의 화폐』, 1982.
- _____, 『한국의 화폐』, 1994.
- _____, 『우리나라의 화폐』, 2015.
-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 山本進, 『大清帝國と朝鮮經濟 一開發·貨幣·信用』, 九州大学出版会, 2014.

3. 연구논문

- 강병국, 「고려도경의 시장과 금속화폐 관련 기록 재고」, 『역사학연구』67, 2017.
- 강인욱,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 - 어음과 환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 구문희, 「신라 통일기 지방재정의 구조」, 『역사와 현실』 42, 2001.
- 권내현, 「17-18세기 조선의 화폐 유통과 은」, 『민족문화연구』 74, 2017.
- 권오영,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 36, 2002.
- 권육택, 「한반도 압록강유역 출토 반량전의 주조연대와 출토양상 검토」, 『야외고고학』 30, 2017.
- 권인혁, 「조선초기 화폐유통 연구 - 특히 태종대 저화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32, 1982.
- _____, 「15세기 화폐유통 시도와 그 배경」, 『국사관논총』 30, 1991.
- 김경철, 「남한지역 출토 한대 금속화폐와 그 성격」, 『호남고고학보』 27, 2007.
- 김광식, 「고려 숙종대의 왕권과 사원세력 - 주전정책의 배경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6, 1989.
- 김기흥, 「8·9세기 통일신라의 경제」, 『한국고대사연구』 6, 1993.
- 김도연, 「고려시기 은화유통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학보』 10, 고려사학회, 2001.
- _____, 「고려시기 화폐유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동철, 「고려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부대사학』 9, 1985.
- _____, 「상업과 화폐」,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병인·김도영, 「고려 전기 금속화폐와 점포」, 『한국사학보』39, 2010.
- 김병하, 「이조전기의 화폐유통 - 포화의 화폐기능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 2, 1970.
- _____, 「고려시기의 화폐유통」, 『경희사학』 3, 1970.
- 김병하, 「고려조의 금속화폐 유통과 그 시각」, 『동양학』 5, 1975.
- _____, 「명도전의 유통과 도환」, 『한국학논집』 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 김삼수, 「고려시기의 경제사상 - 화폐 신용 자본 및 이자·이윤사상」, 『숙명여대논문집』, 1978.
- 김상기, 「대각국사 의천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 3, 국사편찬위원회, 1959.
- 김상민,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 고조선」, 『한국고고학보』 107, 2018.
- 김영제, 「10~13세기 송전과 동아시아의 화폐경제-특히 송전의 고려유입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8, 2004.
-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동전 - 『부역실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4, 2008.
- 김종태, 「낙랑시대의 천폐명문고」, 『전북사학』 1, 1977.
- 김창석, 「7세기 신라의 사회와 경제」, 『한국역사연구회회보』 27, 1996.
- _____,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 현실』 42, 2001.
- _____, 「왕경인의 소비생활과 교역」,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8, 2007.
- 남부희, 「조선초기 저화유통과 상공업 연구」, 『경남사학』 2, 1985.
- 박남수,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정과 백제의 형제」, 『한국사연구』 149, 2010.
- 박선미, 「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의 고조선문화와 명도전 유적」, 『선사와 고대』 14, 2000.
- _____, 「웅기 송평동 출토 패각 및 패각형 옥 검토」, 『한국고고학보』 56, 2005.

- _____, 「한반도 출토 한대 화폐와 그 의미」, 『선사와 고대』 28, 2008.
- _____, 「동북아시아의 교류사 복원을 위한 명도전의 초보적 탐토」, 『동북아문화연구』 18, 2009.
- 박찬홍, 「신라의 결부제와 조의 수취」, 『역사와 현실』 42, 2001.
- 박평식, 「고려후기 개경시전」,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 _____, 「고려후기 개경상업」, 『국사관논총』 98, 2002.
- _____, 「조선전기의 화폐론」, 『역사교육』 118, 2011.
- _____, 「조선초기의 화폐정책과 포화유통」, 『동방학지』 158, 2012.
- _____, 「조선전기의 추포유통과 화폐경제」, 『역사학보』 234, 2017.
-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 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 1984.
- _____, 「19세기 전반 조세 수탈 구조의 특질과 기반」, 『국사관논총』 17, 1990.
- 방민규, 「고고학 발굴성과를 통해 본 고대 한반도 남해안지역의 대외교류」, 『전통문화논총』 10, 2012.
- 백승철, 「17세기 동전 유통론과 화폐정책의 변화」,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2000.
- _____, 「17세기 국가주도의 상업론과 상업정책」, 『조선후기 체제변동과 속대전』, 해안, 2005.
- 송재선,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섭 박사 화갑 기념 사학 논총』, 1986.
- 신병주, 「17세기 전반 복인 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992.
- 안병우, 「신라통일기의 경제제도」, 『역사와 현실』 14, 1994.
- 양동휴, 「16-19세기 귀금속의 이동과 동아시아 화폐제도의 변화」, 『경제사학』 54, 2013.
- 원유한, 「18세기에 있어서의 화폐정책」, 『사학연구』 19, 1967.
- _____, 「잠곡 김육의 화폐경제사상」, 『홍대논총』 11, 1980.

- 원유환, 「반계 유형원의 상업 진흥론」, 『홍대논총』 15, 1989.
- _____, 「관료학자 김신국의 화폐경제론」, 『용암 차문섭 교수 화갑 기념 조선시대사 연구』, 신서원, 1989.
- 원재린, 「18·19세기 북학론의 전개와 정부의 상공업 정책」, 『세도정권기 조선사회와 대전회통』, 혜안, 2007.
- 위은숙, 「원간섭기 보초의 유통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김윤곤교수정년기념논총-』, 2001.
- 유현재, 「16세기 추포 유통과 그 성격」, 『한국사론』 52, 2006.
- _____, 「조선초기 화폐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저화유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9, 2009.
- _____, 「조선후기 주전 정책과 재정 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임란 이후 주전론과 왜전 수입」, 『동국사학』 56, 2014.
- _____, 「18세기 은전비가의 변동과 의미」, 『역사와 현실』 97, 2015.
- _____, 「18세기 원납의 증가와 동전의 재정 활용」, 『한국문화』 76, 2016.
- 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실태」, 『한국사론』 46, 2001.
- 이경록, 「고려전기 은폐제도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 2000.
- 이능식, 「여말·선초의 화폐제도」, 『진단학보』 16, 1949.
- 이병희, 「대각국사 의천의 주전론」, 『천태학연구』 4, 2000.
- 이범기,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고대남해안지방 대외교류」, 『지방사와 지방문화』 9, 2006.
- 이선복, 좌용주, 「흑요석 산지 추정 연구의 재검토」, 『한국구석기학보』 31, 2015.
- 이양수, 「변한의 대외교역」, 『고고광장』 8, 2011.
- 이영훈·박이택,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2007.
- 이재운, 「18세기 화폐경제의 발전과 전황」, 『학림』 18, 1997.

- 이정수, 「16세기 면포유통의 이중화와 화폐유통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25, 2003.
- _____, 「16세기 중반~18세기 초의 화폐유통 실태 - 생활일기류와 전답매매명문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 이정신, 「고려시기 금·은 채굴과 금소, 은소」, 『역사와 담론』 57, 2010.
- _____, 「고려시기 동전의 사용현황과 동소」, 『한국사학보』 25, 2006.
- 이종영, 「조선초 화폐제의 변천」, 『인문과학』 7, 1962.
- 이주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동전의 성격과 역년대」, 『신라문화』 43, 2014.
- 이헌창,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9, 1999.
- _____, 「임진왜란과 국제무역」,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015.
- _____, 「조선시대 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2011.
- 이흥두, 「고려전기의 화폐 주조와 유통정책」, 『실학사상연구』 28, 2005.
- 이현혜, 「4세기 가야사회의 교역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 장수비 외, 「조선시대 상평통보의 성분 조성과 미세조직을 통한 재료학적 특성 연구」, 『보존과학저널』 31, 2015.
- 장용준, 「한국 구석기시대 흑요석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구석기학보』 28, 2013.
- 전병무, 「고려시기 은유통과 은소」, 『한국사연구』 78, 1992.
- _____, 「고려 공민왕대 은전주조론의 대두와 그 성격」, 『북악사론』 6, 1999.
- 전수병, 「조선 태종대의 화폐정책 - 저화유통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0, 1983.
- 정용범, 「고려시기 중국전 유통과 주전책 -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 정철,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17.

정혁수, 「문무왕의 건포 규격 조정과 통일정책」, 『신라사학보』 38, 2016.

주경철, 「해양시대의 화폐와 귀금속」, 『서양사연구』 32, 2005.

채응석, 「고려전기 화폐유통의 기반」, 『한국문화』 9, 1988.

_____, 「고려 후기 유통경제의 조건과 양상」, 『한국 고대·중세의 지배 체제와 농민』, 1997.

최맹식, 「고려 동전의 효용성에 대하여-유적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60, 2000.

한명기, 「17세기 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1992.

허은철, 「고려 초기 법정화폐 정책」, 『청람사학』 22, 2013.

秋浦秀雄, 「高麗 肅宗朝に於ける 鑄錢動機に就て(上)(中)(下)」, 『青丘學叢』9, 1932.

井上正夫, 「高麗の貨幣-中世東アジア通貨圏を背景にして」, 『青丘學術論集』2, 1992.

奥村周司, 「高麗の貨幣流通について-朝貢との關聯性-」, 『早稻田實業學校研究紀要』10, 1975.

大田由紀夫, 「12~15世紀初頭東アジアにおける銅錢の流布」, 『社會經濟史學』 61-2, 1995.

黑田幹一, 「朝鮮上代貨幣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小葉田淳, 「高麗朝貨幣史考」, 『經濟史研究』20, 1931.

須川英徳, 「高麗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諸貨幣-錢・銀・貨楮貨-」, 『歴史評論』 516, 1993.

_____, 「高麗末から朝鮮初における貨幣論の展開-専制國家の財政運用と楮貨」, (武田幸男 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7.

_____, 「朝鮮時代の貨幣」, 『歴史學研究』 711, 1998.

_____, 「朝鮮前期の貨幣發行とその論理」, 『錢貨-前近代日本の貨幣と國家』, 青木書店, 2001.

田村專之助,「高麗末期に於ける楮貨制採用問題」,『歴史學研究』7-3, 1937.

_____,「高麗の貨幣銀瓶の形態及び性質について」,『浮田和民博士記念史學論文集』, 1943.

三宅長策,「高麗時代の貨幣」,『朝鮮』4-6, 1910.

宮原兎一,「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朝鮮學報』2, 1951.

_____,「朝鮮初期の楮貨について」,『東洋史學論集』3, 1954.

山本進,「朝鮮前期の楮貨通用政策」,『國際論集』16, 北九州市立大學, 2018.